

설레임 가득

혜택으로 두근두근,
IBK기업은행과 함께 풍성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IBK기업은행 I-want 환전페스티벌

기간 2016.7.4.~ 2016.9.13 | 대상 IBK기업은행 환전고객(개인)

혜택1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경품 추첨 **1등** 하나투어 전세기 해외항공권 1명(1인2매) **2등** 여행상품권(20만원) 3명 **3등** 외식상품 모바일상품권 20명 **기은센상** 커피음료권 100명
▶ 당첨자발표 1차 2016.8.18(목) / 2차 2016.9.29(목)

혜택2 VVIP로 누리는 면세점 특혜 SM면세점 최대 32%할인, 기프트카드 1만원 교환권, 특별저렴금 1만원 **혜택3** 환율 최대 70% 우대 USD, JPY, EUR 최대 70%, 기타 통화 최대 40% 우대 **혜택4** 공항철도 할인 본인포함 4명 (1인당 1,100원 할인/법인 가능)

※ 이벤트 경품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환일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재발송되지 않으며, 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30일 이내 경품 미수령 또는 잘못된 고객정보(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등 5만원 초과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본인 부담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IBK고객센터(☎1566-2566) 및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6-2212호(2016.07.20)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080-3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양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ibkethics@ibk.co.kr)

커버스토리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경제양극화 해소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시작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2017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전개했다.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6_7, 8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53호

경실련 | 공동대표 인영진 선월몽산 김원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서순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철한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김한기 남은경 김지경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6년 8월 18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동승동칼럼

06 '김영란 법' 시민들이 수호해야 한다 / 고계현

기획특집

- 09 ① 최저임금 결정, 이제는 제도개선에 나설 때 / 정택수
- 13 ② 전 세계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김용석
- 18 ③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발걸음 / 정유림
- 22 ④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과 민생 살리기 / 윤은주

시사포커스

- 26 ① 국회의원이 특권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다 / 유애지
- 30 ② 한국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부실국책은행과 특정기업 지원 / 권오인
- 34 ③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직접시공제가 해법 / 최승섭
- 38 ④ 개인정보 보호 원칙 깨부수기가 창조경제? / 박지호
- 42 ⑤ 상용화 20년, GMO 완전표시제의 현 위치 / 박지호

통일마당

46 사드 배치와 아마추어 정부 / 양무진

경실련이야기

49 신임 공동대표 인터뷰 2 - 김원배 공동대표 / 김지경

지빈퇴이야기

54 캠페이너,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현아



09 기획특집1
최저임금 결정,
이제는 제도개선에 나설 때



26 시사포커스1
국회의원이 특권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다

지역이야기

- 57 ① 인천경실련 - 중국어선 불법조업, 국가안위와 해양영토의 문제대! / 김성아
- 60 ② 청주경실련 -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이병관
- 63 ③ 제주경실련 -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 / 양시경

인터이야기

- 66 2016년 여름 경제정책팀 인터뷰 후기 / 김고운
- 68 2016년 여름 국제팀 인터뷰 후기 / 김새안

회원게시판

70 편집자에게 / 조성훈

동승동 책방골목

- 71 ① 남과 북 그리고 중간지대, '개성공단'이 필요하다 / 정유림
- 72 ② 소유가 정당일까요? / 김용석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73 SNS에서 많이 본 이슈
신입회원 한마당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49 경실련이야기
공동대표 인터뷰



57 지역이야기1
인천경실련 - 중국어선 불법조업,
국가안위와 해양영토의 문제대

‘김영란 법’ 시민들이 수호해야 한다.



‘김영란 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법리적 논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일부 정치권·언론·사업자들이 마치 이 법이 경제를 망치게 할 것인 양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행을 1년 6개월 유보해 놓고도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문제가 많다고 떠드는 일부 정부 부처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정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사들이 일부지만 자신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인지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심히 왜곡하고 있다.

‘김영란 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 공기업 사원, 언론사 종사자, 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에게 일체의 직·간접 청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았을 시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만원 이내로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사회상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 시행령을 통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부조 10만원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제는 관행처럼 일반화된 공공영역의 청탁과 접대, 향응 등 부적절한 행동을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한번은 넘어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경기 악영향을 핑계로 ‘시행연기’부터 ‘허용금액 상향 조정’ ‘일부 업종과 품목 적용예외’까지 법 시행을 자초 내지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소비를 위축시켜 선물 관련 1~2조원, 음식점 4조원 정도의 매출이 줄 것이라 주장하며 가뜰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출 축소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규모도 발표기관 마다 제각각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법 무력화에 대한 선동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1년에 몇 번 정도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대접받고,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며, 10만원이 넘는 부조를 받는지. 일반 시민들은 거의 드물다. 적어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다. 그렇다면 줄어들 것이라는 수조원의 매출은 거의 대다수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향응이나 접대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 뇌물성 접대나 향응으로 수조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썩은 사회이고 벌써 망했어야 할 사회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규모가 이 정도라면 국가와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명운을 걸고서라도 이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다. 규모가 이 정도이니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여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부패와 비리를 용인하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법 시행으로 단순히 접대비의 지출 측면만 고려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어려워지는 업종이나 품목도 있을 수 있다. 순수한 피해 업종이나 품목의 경우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를 국민경제 전체의 악영향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 전체로 바라보면 꼭 걱정만 할 문제는 아니다. 고가의 선물이나 향응, 접대 등이 감소한다고 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액의 선물이나 접대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상품과 접대로 대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남는 금액도 또 다른 접대비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04년 국세청이 도입한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비의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후, 도입 첫째 백화점 매출은 10% 정도 감소했지만 일반 소매업 매출은 그만큼 증가한 것이 좋은 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 법으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선물 구입액은 고작 1%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를 증명한다. 또 접대비 총액 감소분의 돈은 다른 대체 용도를 찾아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투자에 이용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축의 경우 은행을 통해 급한 사람이 이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에 지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규모도 크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김영란 법’ 보다 더 엄격한 법으로 부패와 비리로 연결되는 공공의 접대와 향응을 엄단하고 있다. 미국은 1961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비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금지’와 ‘불법사례수수 금지’외에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부 이외로부터 보수,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물이나 식사대접도 20달러(약 2만2천원)가 넘으면 처벌한다. 일본의 경우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 결정, 이제는 제도개선에 나설 때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de@ccej.or.kr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천 엔(약 5만3천원)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 증여를 한 사업자 등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영국도 ‘뇌물죄’ 등을 통해 30파운드(약 4만4천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가 금지된다. 독일은 ‘부패단속법’을 통해 25유로(약 3만1천원) 범위 내에서 선물만 허용한다. 이들 나라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 지하경제 규모 순위 6위인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OECD 사무국은 지난 5월 발간한 ‘뇌물 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보고서에서 “부패가 공공투자를 왜곡하고 공공재원을 잠식하여 민간부문 생산성을 낮추고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며 경제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패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R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고, 부패인식지수가 25% 상승할 때 소득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9위의 우리나라도 OECD국가 평균인 69점 정도까지 부패인식지수가 올라가면 명목성장률이 0.65%가 올라갈 수 있다고 국내 한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순간 힘들더라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올바른 균형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다고 부패와 비리가 점철되는 사회를 유지하여 소수 기득권층만 살찌우는 불균형 성장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은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맞물려 있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김영란법’을 제대로 시행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택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시행하면서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 시민들의 각성과 감시, 비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으로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다수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가족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대 총선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20대 총선에서 제 1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데 이어, 여당도 근로장려세제 효과의 포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최대 9,000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은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여소야대로 귀결된 총선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없어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촉구 거리캠페인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되면 2인 가족 생계비 274만4,000원(2014년 기준)의 76%, 3인 가족 생계비 336만3,000원의 62%를 충족하게 된다.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유지해왔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확대된다면 기업들도 매출이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공정경쟁 하도록 토대를 만든다면 한국경제는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및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며, 대선주자들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서구 정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 예고한 영국을 비롯해, 일본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더불어 매년 3%씩 인상해 최저임금을 1000엔(약 1만1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염원하는 노사화합 퍼포먼스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5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과 실업률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IMF가 지난 2월 주요 20개국 회의에 낸 보고서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아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비싼 상가임대료가 주요 원인이다.

경실련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 부담도 크지 않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지급하자는 것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대승적 결단이나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상태로 법적 심의시한인 6월 28일에서 20일 이상 넘기며 진행됐다. 7월 16일 새벽 개최된 14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했으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 8.1% 보다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7.3% 인상률에서는 앞으로의 인상

를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드러난 최저임금 협상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 벌어진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에 부딪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재안은 늘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선출을 담당하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늘 제기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사용자 측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도출한 결과나 다름없다.

현재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는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면, 당장 이번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의의 문제이다. 경실련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7월 12일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전 세계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김용석 최저임금TF, 사회정책팀 간사
cumdo@ccej.or.kr

주요 정당들이 20대 총선 기간 동안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 측의 주장은 편견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독일 : 최저임금제 도입 후 실업률이 4.8%에서 4.2%로 감소해

독일은 2015년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 독일은 교섭 자율주의를 취했다. 국가가 노사 간 단체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유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요율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주요인이 됐다.

특히 하르츠 개혁 시행(2003년)으로 저임금 일자리(mini job)가 확산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제가 논의될 당시 독일에서도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와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계와 몇몇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소규모 기업들은 직원을 줄이고,

월간경실련

2016년 7. 8월호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 경제 지표는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2015년 1월 4.8%에서 2016년 3월 현재 월 4.2%로 오히려 하락했다.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 직후의 고용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자는 전년 동기 3.4% 감소했고, 저고용 근로자 역시 전년 동기 2.3% 감소했다. 반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1.8% 증가했다.

(단위 : 천명)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전년 동기(14년 4월 대비)	
				절댓값	%
실업자	3,017	2,931	2,842	-100	-3.4
불안정 고용근로자 (저고용 근로자)	3,888	3,816	3,638	-76	-2.3
신규일자리	518	542	551	61,000	2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불안정 고용근로자(저고용 근로자)는 실업자 외에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실직을 면한 근로자를 포함.
출처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독일 노동청 자료

올해 1월,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시장 연구소(IAB)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이 2015년을 시작으로 법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4만개 이상의 값싼 직업이 사라진 반면, 약 5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시장조사 업체인 GfK에 따르면 2015년 5월 독일인의 소비 성향은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GfK는 독일 소비자들의 가계 수입은 2014년 5월에 비해 8.8% 늘어났는데, 구매 욕구는 무려 26.5%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간 소비의 증가는 지난 1월 27일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서 독일 경제가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2014	2015	2016 전망
실질 GDP 성장률	1.6	1.7	1.7
고용인구 증가율	0.9	0.8	0.9
실업률	6.7	6.4	6.4
소비 증가율	0.9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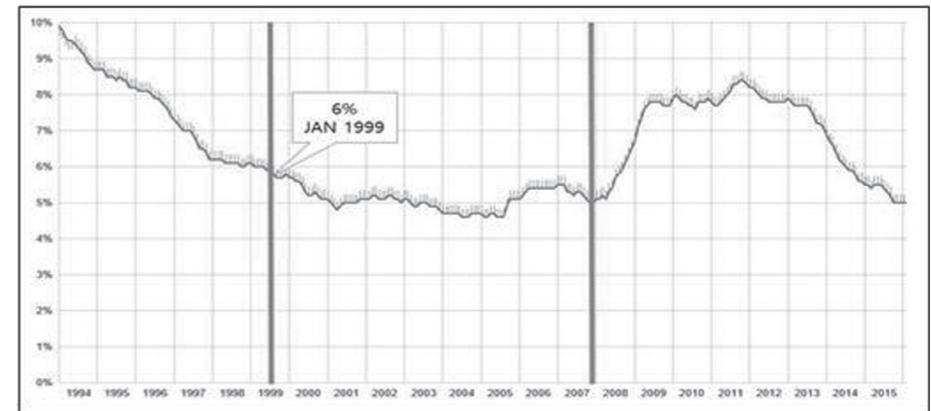
▲ 독일경제 주요지표 추이 및 전망

출처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독일 경제에너지부 '2016년 경제전망' 정리보고

영국 : 최저임금제 도입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영국은 1999년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는데 도입 전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최저임금의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앨런 매닝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고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영국은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영향은 주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확인한 영국의 실업률 추이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99년의 변화보다 2007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더 크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보다 경기 변동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이다.



▲ 영국 실업률 추이

출처 : Eurostat, Last updated: May 30, 2016

영국 저임금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권고와 자문을 맡고 있는 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거의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도입으로 기업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고, 생산성이 향상된 증거도 발견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영국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미국 : 최저임금인상 물결, 경기회복 가속화에 기여

미 연방차원에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09년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미국은 2012년 시애틀을 중심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이 만장일치로 시애틀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일명 텐텐 법안을 2015 신년 연설에서 제안하기에 이른다.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바람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물결은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이클 라이히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최저임금 15달러 - 로스앤젤레스 사례 연구 -”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로스앤젤레스 시와 나머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동자, 주민,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6월 공개한 Beige Book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소비 지출 확대에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 최저임금 상승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져 GDP 성장률에 기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2016년부터 매년 3%씩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급 798엔(전국 평균, 약 8,800원)인 최저임금을 빠른 기간 내에 1000엔(약 11,0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침체 일로에 있는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연속으로 하락했다. 아베 정부는 국정 목표인 ‘2020년까지 GDP 600조 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GDP의 60%인 개인 소비를 늘려야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18엔 높은 798엔(전국 평균)으로 인상한 바 있는데 인상률은 역대 최대 폭인 2.3%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매년 3%씩 오르면 2020년에는 전국 평균 920엔, 2023년에는 1000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러시아 정부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6204루블(약 10만4000원)에서 약 20% 포인트 높아진 월 7500루블(약 12만6000원)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 1월에도 최저임금을 4% 포인트 인상한 바 있어 벌써 올해 들어 두 번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지난해 실질 임금이 9.3% 포인트 하락하자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운 것이다. 개도국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는 부를 좀 더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노동자들의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는데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고, 루마니아 역시 올해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미니 잡(mini job)은 줄고,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져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제를 올해 4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 9파운드(약 1만 5000원)까지 올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한 영국의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학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해 왔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면서 과거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 촉발된 것이다. 임금소득 인상을 통한 구매력 확대가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16

2016년 7월호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경실련의 발걸음

- 최저임금 집중행동주간

정유림 최저임금 TF, 정치사법팀 간사
square520@ccej.or.kr

경실련은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집중사업으로 선정하고, 최저임금TF를 발족시킨 후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집중행동주간을 6월 21일부터 진행했다. 최저임금TF에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수준에 동의하나, 제도 상 당장 달성이 어렵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영세사업장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절감했다. 따라서 매년 13% 이상씩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을 달성하는 안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집중행동 주간에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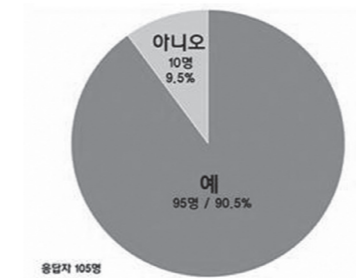
- 6월 22일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 6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입장 발표
- 6월 2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온라인 캠페인 “#만만캠페인”개시
- 6월 27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 6월 28일 :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6월 29일 : 최저임금 협상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의 세계적 흐름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 7월 6일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 7월 12일 :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 7월 17일 :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7월 20일 : 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전문가, 전국 경실련,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발걸음을 걸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동 선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인증샷 캠페인인

‘#만만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 전국경실련 동시입장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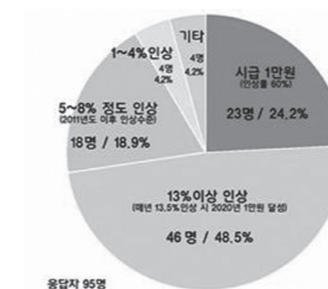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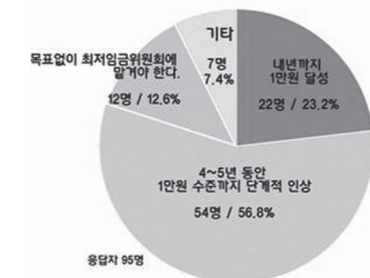
전문가, 전국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어떤 발걸음을 걸었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23.2%(22명)였다. 총 80%인 다수의 전문가가 최저임금 1만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12.6%(12명)가 응답했고, 기타의견은 7.4%(7명)였다. 기타 의견의 경우, 단계적이되 4년 내에 1만원 달성, 2~3년 안에 1만원 달성, 중위 소득 반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46명)가 13% 이상 인상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매년 13.5% 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1만원이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 18.9%(18명)은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인상률 제시의 필요성이 보여졌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13%이상으로 제안했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자는 총선 공약에도 부합하고,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2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문가 선언이 진행됐다.



▲ 2016.7.6. 경실련 최저임금 전문가선언 발표 기자회견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윤석현 전 숭실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 회장),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등 현직·원로, 중진·소장 학자, 진보·보수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 함께 외치는 최저임금 인상

전국 경실련이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입장발표와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광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경주 경실련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에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알렸고 그 외의 많은 지역이 입장발표의 형태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한자리에 모였다. 7월 12일 광화문에 모여 '최소·최저임금 13% 이상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경실련 활동가와 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최소 13%인상'이라는 구호를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거듭 촉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우산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2016.07.12. 최저임금 전국 합동 기자회견

2017년도 최저임금을 넘어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의 시작

이러한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에서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약 7.3%인상했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경실련 집중행동주간은 이렇듯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경실련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소득양극화 해결 및 저성장 시대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실련은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000

2016년 7월호

2016년 7월호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과 ‘민생 살리기’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부터 도입해야

윤은주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dongi78@ccej.or.kr

19대 국회는 결국 미친 전셋값과 최악의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끝내 외면한 채,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으로 생색만 내고 끝났다. 지난 20대 총선은 민생을 파탄 낸 정부와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절실하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마지막까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를 경험한 시민은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총선에서 민심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었다.

최우선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부터 도입해야

경실련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해 임대료 폭등을 막는 제도다. 현행법상에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정이 있지만, 계약 기간(2년)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기간(2년) 내 5% 상한이라는 규정을 계약기간 갱신 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2년만 지나면 전셋값을 무한정 올려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함으로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적 거주 기간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현재 계약 기간 2년을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으면 최소 6년간 임대차기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계약갱신제도가 도입돼 있고 이 제도를 전제로 다양한 임대료 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관련한 차임증감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제도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계약갱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 갱신이 되지 않으면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조정이 필요 없게 된다. 기본적인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은 임대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협상이나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계약 기간이 보장돼야 세입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임대인과 임대료나 각종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왜 반대하지? 단기적 임대료 폭등?? 임대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이 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 시행 전 임대인들이 앞으로 못 올릴 보증금과 차임을 계산해 미리 한꺼번에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셋값이 16.8%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의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1980년 중후반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계약기간 연장이후 1991년 1.9%, 1992년 7.5%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가격급등 논리 외에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많다.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도 있듯이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반이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시장에만 맡겨둘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보았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그 조차도 「국부론」에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행사는 정부 법률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은 시장논리,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외에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우리 사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임대물량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적절치 않다. 전세공급 유인 축소로 인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월세가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20대 국회야~ '주거'를 부탁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 4건 발의 (2016. 7. 20 기준)

	박영선	윤후덕	정성호	송기석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전월세상한제	상한기준	5%		
	적용범위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2년		
	갱신향수	1회		

이건 시작일 뿐~! 20대 국회는 법 개정 문제 없겠조?? 

20대 국회, 현재까지 4건 발의

20대 국회 개원 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4건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자 제1호로 발의를 한 뒤 이어 윤후덕, 정성호,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 윤후덕, 정성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송기석 의원은 국민의당이다. 4개 법안 모두 현재 계약 기간 2년을 1회 갱신해 최소 4년 보장과 5% 이내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20대 총선 공약에서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상률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연 3.3% 이내로 상한선을 정하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소 6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아직 당론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미 선진국 많은 나라는 세입자의 갱신청구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갱신거절(해지사유)을 입증해야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일본은 계약갱신청구제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가 있어 장기간 임대차 보장이 시행되고 있다.

경실련 안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경실련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안은 계약 갱신 시 주택 임대료 인상은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세 또는 월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못하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안은 최초 임대계약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6년간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부여한다는 의미다.

[경실련 안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	
경실련안 경실련안	상한기준	적용범위	계약기간	갱신향수
	5%	갱신	2년	2회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막을 수 없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는 최우선으로 주거안정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부터 도입해야 한다. 경실련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TF'를 구성했다.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특권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다

- 국회의원 6대 특권 개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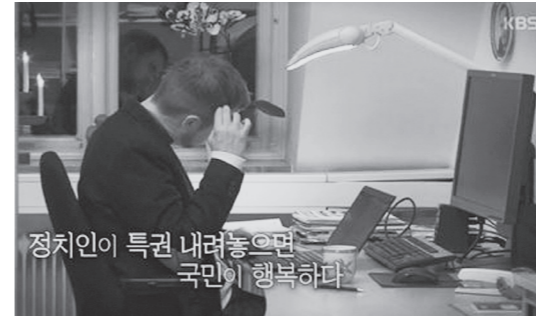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길은 차갑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는 매년 새로운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4년 마다 등장하는 단골코스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위원회, 혁신위원회 등등 이름도 다양한 위원회가 국회 안팎으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란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 특권은 얼마나 사라졌고, 정치는 얼마나 개혁되었나? 한마디로 매년 반복되지만 실속은 없는

공허한 외침만 있었던 셈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향간에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개나 된다는 얘기가까지 나왔다. 살펴보면 그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특권인 것도, 국정조사권처럼 그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권한들도 있었다. 무분별한 정치 불신 조장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없애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특권은 없애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스웨덴 국회의원을 조명한 KBS다큐1의 한 장면

불체포특권은 개선해야 할 특권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다. 헌법상 현행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체포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에서 동료 의원 감싸기 식으로 부결시키거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 내에 체포할 수 없는 형식을 악용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법률적으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한 만큼 즉각 개정할 필요가 있다.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권한, 부적절 언행은 윤리위 강화로 처벌해야

다만 불체포특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인 면책특권은 삼권분립에

의거해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권한으로 불필요가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무책임한 언사와 근거 없는 발언, 인신공격성 막말 등을 하는 경우는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처벌을 위해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감싸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두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국회의원 윤리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수준과 내용을 결정해 권고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셀프 세비,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문제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의 월급적인 ‘세비’일 것이다. 국회사무처 발간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월 646만 4000원, 입법활동비 313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1149만 6820원(연봉 1억 3800만원)이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천251만8천690원(월평균 770만9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비용		단위: 원
구분	세부 내용	연간 금액
연봉	-일반수당(기본급)	1억3800만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명절휴가비	
의정 활동 경비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발간비 등	9300만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공무수행 출장비	
보좌진 보수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4억4500만
	연간 최소 6억7600만	

20대 국회 개원일 5월 30일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출처: 동아일보

천870원)이다. 국회의원 1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보좌진 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2015년 정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1인당 GDP대비 보수는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다. 그에 비해 효과성은 꼴찌 수준이었다. 이렇듯 효과성이 떨어지고 정치 불신이 심각한 데도 세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한 것은 국회 단독결정이라는 의원들의 급여결정방식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국회의원이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 급여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역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구에서 세비를 결정, 국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 정책개발비 등 복

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해야

서영교 의원과 박인숙 의원 문제로 인해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 채용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 문제가 커지고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30명이 퇴직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서로 교차 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혈세로 비용을 받고, 전문적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원의 사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의원 수당법(제9조, 제9조의3)를 개정해 최소한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본인의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해 김영란법 논의 당시 국회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이미 정부와 국회 등 공적기관에 가족이 채용 및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만을 규제할 경우, 각기 다른 의원끼리 서로 채용해주는 일종의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 이에 본인이 6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 다른 의원실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시 일정 범위내 국회의원과의 관계 여부(친인척 여부)를 국회의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채용여부를 심사해 의원에게 통보, 채용시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 필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세비와 별도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국회 운영지원 등의 명목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처와 지급금액은 밝혀지지 않는다. 당연히 지급받은 사람이 지출증빙도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상임위원장의 경우 한 달에 1000만원, 각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원내 활동지원 명목 예산으로 연간 9억 여원이 나눠 지급된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는 한 달에 4~5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 및 결산서를 보면 이러한 특수활동비는 매년 평균 8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그 사용처와 지출 금액 자체가 불투명한 돈이라는 점이다.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용 등을 사적 용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 마디로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제약 없이 의원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

이며,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특수활동비 전체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우리나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정부의 국무위원(총리, 장관 등)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완구(국무총리), 최경환(경제부총리), 황우여(사회부총리) 등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이 19대 국회 현직 의원 신분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해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난다.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2016년 7월 8일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 은행과 특정기업 지원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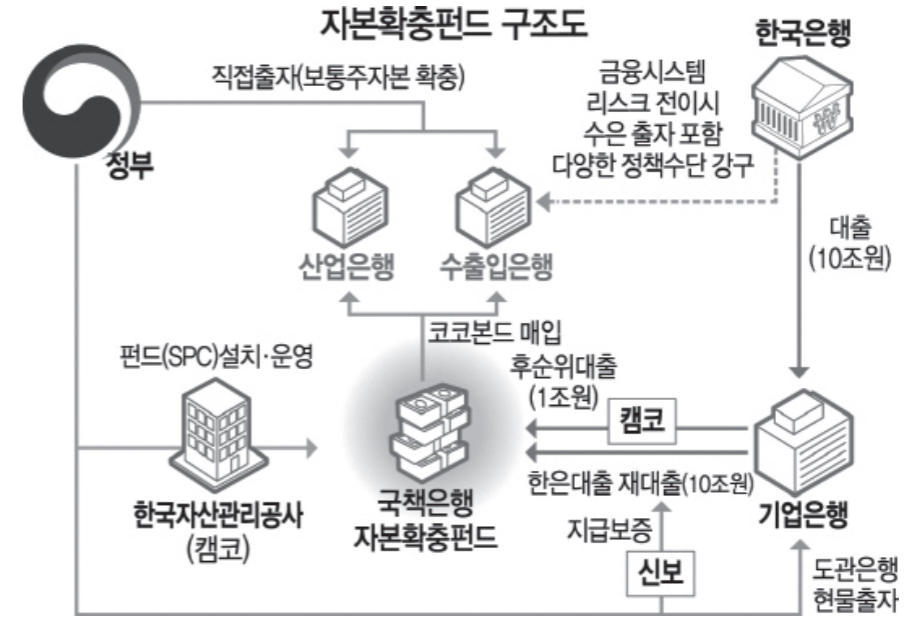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6/16)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하였다. 자본확충펀드는 기업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한은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여,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을 고려할 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춘다는 것

이다. 필요재원은 5조에서 8조원 정도로 추산했다고 한다. 한은의 자본투입 방식은 필요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조달과 투입을 하는 '캐피털 콜'로 한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무슨 상관?

이주열 한은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하였다. 금융안정은 한은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이지만,



▲ 자본확충펀드 구조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대다수 시중은행의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다. 관치금융 및 무분별한 부실기업지원에 따른 국책은행 부실을 금융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메워준다는 것은 한은법에 나타나있는 금융안정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럼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의결함에 따라, 국책은행과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부실 책임소재를 흐리게 함은 물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은 이주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 금융안정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껏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국책은행을 동원한 관치금융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기업들의 부실은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부실책임은 누구하나 지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와 국민들만 부담을 떠안았다. 그 결과 국책은행도 동반부실화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관치금융에 한은이 동조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최종대부자인 한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관치금융에 동조

한은은 금융시장에서의 최종대부자로 물가안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독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독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는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무분별한 부실 기업지원으로 건전성이 훼손된 국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특정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긴급여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은은 이번 대출이 정당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자본확충펀드 참여 역시 공적자금 투입, 반드시 국회 승인 거쳐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것처럼 우회하는 꼼수이다.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과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기업들의 경우 부실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다.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재발방지도 없이, 또 다시 공적자금을 범망을 피해가면서 투입한다는 것은 부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국책은행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여, 재벌기업의 정책금융지원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의 경우 없애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국책은행 부실을 매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된다면, 중앙은행으로의 목적성은 상실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국민동의와 국회 승인을 얻어 정부의 재정으로 정당하게 진행함이 옳다.

여야 3당은 7월 22일 조선 및 해양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잠정합의 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책은행 및 기업 부실에 대해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

업구조조정은 도덕적 해이와 관치금융이 팽배해져 있는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하에 진행함이 옳다. 지금도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기업 노동자들과 관련 지역은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부실을 매우는데 대규모 공적자금을 쏟아 넣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투입시켜야 할 것이다. ☺☺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일지〉

- ▲ 2016. 3. 21 현대상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 ▲ 2016. 3. 29 채권단, 현대상선 자율협약 가결
- ▲ 2016. 4. 25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 ▲ 2016. 4. 26 정부, 3차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 2016. 4. 26. 경실련, 정부의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및 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 ▶ 2016. 5. 3 경실련,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 2016. 5. 4 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
- ▲ 2016. 5. 4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 회의 개시
- ▶ 2016. 5. 10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 2016. 5. 12 현대중공업, 채권단에 자구안 제출
- ▲ 2016. 5. 17 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 산에 자구안 제출
- ▲ 2016. 5. 19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
- ▶ 2016. 5. 19 경실련,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 등 공개질의
- ▲ 2016. 5. 20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은행 산에 추가 자구안 제출
- ▲ 2016. 5. 20 현대중공업, 생산직 대상 희망퇴직 신청
- ▲ 2016. 6. 1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서 8천42억 채무재조정 완료
- ▲ 2016. 6. 1 산은, 삼성중공업 1조5천억원 규모 자구안 수용
- ▲ 2016. 6. 1 하나은행, 현대중공업 3조5천억원 규모 자구안 잠정 승인
- ▲ 2016. 6. 8 정부·한은,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 발표
- ▶ 2016. 7. 1 경실련, 한국은행 금융위 자본확충펀드 대출 반대 의견 발표
- ▲ 2016. 7. 1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자본확충펀드 대출 의결
- ▲ 2016. 7. 22 여야3당 조선 및 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잠정 합의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직접시공제가 해법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남양주 지하철, 철산대교 등 올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 평균 사망자는 437명으로 전 산업을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다. 부상자는 2.5만 명에 달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붕괴’, ‘추락’ 등은 이미 일상화된 기삿거리로 전락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건설업 = 힘든 일, 위험한 일, 저임금이라는 인식

건설업은 ‘힘든 일’, ‘위험한 일’로 치부된다. 이에 더해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건설현장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한만큼 대접받지 못한 저임금 직업이 되었다. 내국인

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고령화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14년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25.2%, 50대 28.7%, 60대 14.1%에 달한다. 40대 이상 종사자 비율이 전체산업보다 19.2%나 높다.

이러한 건설 산업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접시공제도이다. 직접시공제란 공공(정부)의 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원도급업체가 일정비율의 공사를 직접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많이 알려졌듯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흔히

알려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공공건설뿐만 아니라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등 대기업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아파트들 또한 대부분 원청 업체가 아닌, 3-4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이름 모를 업체들이 수행한다.

시공능력 없는 이름만 건설사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 주택, 항만, 도서관 등의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체들만 수주가 가능하다. 이후 공사를 쪼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업 구조이다. 원청 대형건설사들은 건설기능 인력과 건설장비를 직접보유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사를 하청업체에게 하도급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청업체 또한 자신보다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고 중간 이윤을 남긴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 수는 총 5만여 개로 편의점 수보다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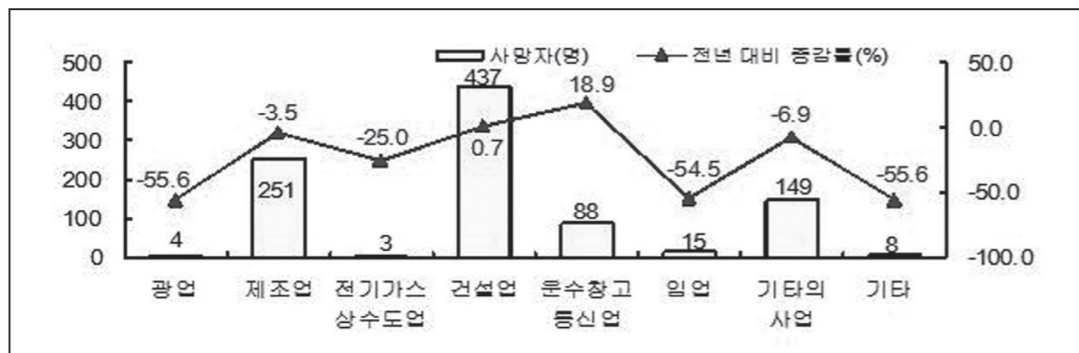
미국은 이러한 건설업체를 브로커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대부분 ‘건설사’가 아니라 ‘브로커’인 셈이다. 건설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수주만 하면, 시공을 담당할 인력과 장비 없이도 착취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불법알선업자에게 착취를 당하 후의 비용만을 지급 받은 등 댓가에 훨씬 못 미치는 대접을 받는다. 대형 원도급업체들의 저가 수주가 가능한 이유가 하도급업체에게 그 고통을 모두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50%직접시공제 도입 필요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통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공사비 이윤을 거두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2006년 직접시공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30억 원 미만 소형공사의 30-50%만 직접 시공토록 해 실효성이 없어 왔다(현재 50억 원). 연간 50억 원 미만 공사는 약 8만 건으로 관료들이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직접시공제 위반건수가 30여건(0.05%)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경실련이 후원하고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직접시공제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업계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현장의 체불, 안전사고의 근원은 다단계 하청방식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잘못된 구조”라며, “실효성이 없는 소규모 공사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전체 사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100억 원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00억 원의 공공공사의 50%(계약금액 기준)를 직접시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 업체들이 계약금액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만 정규직 개념이



▲ 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외국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사례

*출처:대한건설협회 등

구분	내용
미국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강제 - 50%이상 : 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 등 - 30%이상 :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버지니아주 등
영국(교통부 도로국)	계약금액의 60%이상을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프랑스	qualibat(건축분야에 있어서 자격증명·품질보증 증명기관)은 원도급의 직접시공비율 70%이상을 요구
독일(베를린주, 바이에른주 등)	연방정부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원수급인의 최소 직접시공비율을 30%이상으로 규정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제6조에서 공사의 일괄위임이나 일괄하도급 금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2000년시행)」 제48조 및 제58조에 직접시공의무화 및 벌칙규정 등

아니라 공사건별 계약직 개념이다. 정규직보다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일당직 보다는 훨씬 고용 안정을 높일 수 있다. 1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공사 건수는 연간 전체 공사의 5%로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공사금액은 50%이상으로 단기간에 직접시공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우선 공공공사에 적용 후 정책성과를 판단해 추후 민간공사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 소장은 “원도급업체는 관리회사일뿐, 시공을 담당할 수 있는 건설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다단계 생산구조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임을 지적했다. 관리감독이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의해 좌우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사 중단·지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각종 분쟁으로 원가가 상승해 결국은 부실시공의 가능

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강제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있거나 발주자의 권한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 등 방식은 다르지만, 정부와 계약한 시공업체가 실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직접시공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전문 건설업 간막이식 영업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직접시공제 정상화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기존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던 물량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전문건설업체도 직접 수주가 가능하도록 원도급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업

역구분 폐지가 필요하다. 건설업체라면 누구나 원도급이 될 수 있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직접시공제 도입에 나서야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직접고용은 건설현장의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어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이다.

토론회 이후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형공사에 대한 공공발주기관과 중견건설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 점은 커다란 의미지만, ①민간공사를 제외한 점, ②100억 원 미만 공사를 제외한 점 ③30%라는 낮은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적용비율을 높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처음부터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현장에서 가장 땀 흘려 일하지만 일한 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



▲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직접시공제 도입 토론회

개인정보 보호 원칙 깨부수기가 창조경제?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동의가 기본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종의 해설서를 내놓으며 발표한 정부 보도 자료는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하지만 그 실상과 내막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다듬자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18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세워졌다.(하지만 그곳이 무엇을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는 ICT산업에 향한 이슈들을 창조경제에 끼워 맞췄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그 희생양이다. 맥락 없는 정책추진과 규제완화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어떤 산업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타깃을 정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다. 빅데이터란 “기업, 정부, 거대조직에서 보유한 방대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로써, 이 데이터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대규모로 분석된다.

창조경제의 걸림돌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들이 존재한다. 이 법들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 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관련법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하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거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민감도가 높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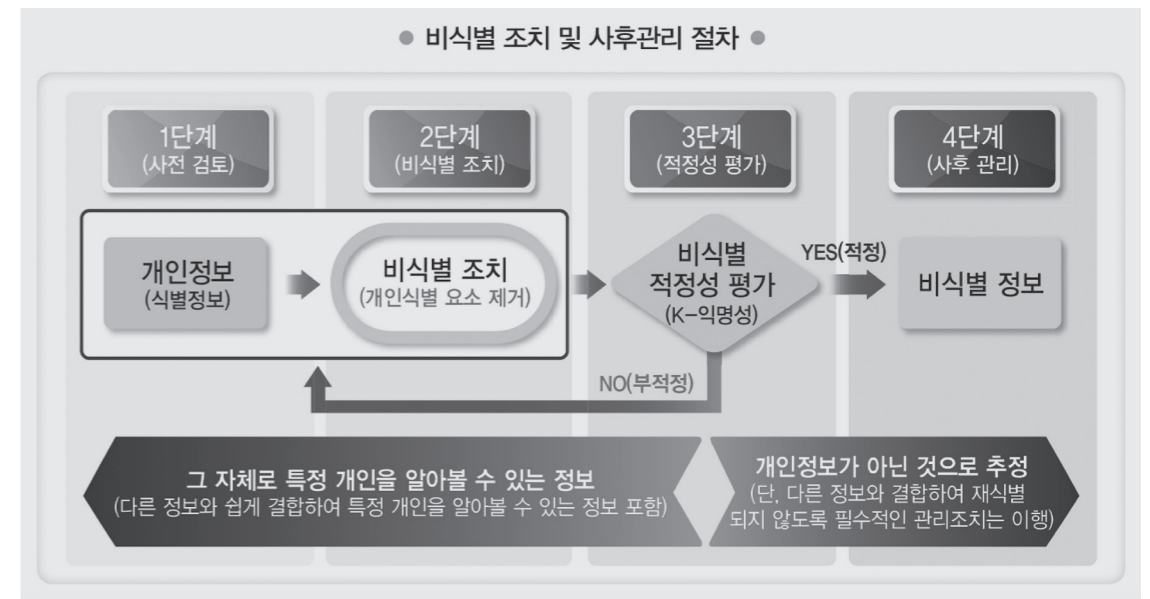
결국 정부는 정공법이 아닌 꼼수를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앞서 말한 가이드라인이다.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제도를 바꿀 필

요도 사실상 없다. 기업들이 마음껏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준 것이다. 그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는 2014년부터 비식별화 조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2014년 초 1억 건이 넘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KT개인정보 유출 등이 연달아 터져 제동이 걸렸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 사건,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IMS헬스코리아의 민감정보 불법매매 사건 등이 연달아 터졌다. 쉽게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할 분위기



▲ 지난 6월 30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한 개인정보는 기업 등이 어떠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경제

2016년 7월호

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2년여를 기다렸고,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자 비식별화 카드를 전면으로 내세워 정책을 재추진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다면 ‘시민들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이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럴 듯하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조치.

하지만 실상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목적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화 처리만 한다면, 기업 등은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저장·분석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기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고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비식별화 처리는 언제든지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 역시 넷플릭스 사례와 메사추세츠 사례를 이야기하며 재식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식별이 되면 즉각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보자. A 기업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데이터 셋을 B 기업에 판매했다. 다시 B 기업이 이 정보를 C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C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고객 개인정보로 인해서 비식별 데이터 셋이 재식별됐다. 그렇다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A, B, C 기업 모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기업만이 재식별된 데이터 셋을 폐기할 책임만 지면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들은 이 전체 과정에서 열람, 정정, 폐기 등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유출에 따른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손쉬운 재식별과 개인들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될게 없다’, ‘빅데이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냐’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위해선 철저한 동의 또는 익명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닌다. 유출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모든 개인정보의 시작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항상 손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유출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만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원칙에 맞게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기초적인 약속이다. 기업은 이를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동의절차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단순히 식별정보 몇 개를 암호화 또는 마스킹 작업을 할게 아니라 개인을 원천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작업**을 하면 된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도 기업 등의 사적 또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통계 및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하여 시민들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이 역시 거부하고 있다. 기업은 미래 전략을 짜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고 이야기 하지만, 그 저의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6년 8월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의 현실이다. 우리 알 수 있다. 기업은 책임을 다 하는 것을 꺼려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뒤를 봐준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없다.

정부의 고장 난 브레이크와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관련법을 강화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법 강화가 미뤄지고 정부의 보증 하에 기업의 무분별한 빅데이터 산업이 만연해진다면, 수천만 시민들의 수십, 수백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우리는 또 다시 마주할 것이다. ☹☹☹



▲ 지난 7월 13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용화 20년, GMO 완전표시제의 현 위치

소비자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재개정해야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최근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공학 기법이 이슈다. 한 언론에 따르면 2013년 처음 기술이 소개된 이후, 연구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은 많은 유전자 편집 동물들을 쏟아냈다. 애완용 작은 돼지, 얼룩무늬 양, 뿔을 없앤 소.¹⁾

학계에서는 이러한 유전자편집 동식물을 기존에 존재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GMO)로 봐야할지를 두고 논쟁 중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존의 GMO와 유전자 가위 기술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자연적이지 않고 과학계, 특정 업계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인위성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동일한 것이 아닌 가란 생각이 든다.

한국의 GMO

인류는 여기까지 왔다.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변

화시킨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침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인 GMO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이다. 1996년 제초제 내성 콩이 등장한 이후,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다양한 GMO 작물, 심지어 GMO 동물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라 GMO 농축수산물의 국내재배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식량자급률 등의 이유로 한 해 약 200만 톤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한다. 2015년에만 약 214.5만톤의 GMO가 수입됐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옥수수가 약 111.6만톤, 미국 브라질 등에서 대두 약 102.9만톤이 수입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대두, GMO가 아닌 일반 수입 옥수수와 대두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체 옥수수 중 10개 중 3개는 GMO이고, 대두는 10개 중 6개가 넘는다. 전체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만 약 40kg의 GMO를 섭취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하는 최종식품에서는 GMO의 존재를 찾아 볼 수 없다. 제조·가공 시 사용된 원재료가 모두 빼곡하게 쓰여 있는데 GMO 표시만 없기 때문이다. 수입산 옥수수, 수입산 대두, 수입산 카놀라 등이 사용되었지만 GMO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한해 200만 톤이 넘는 GMO 옥수수와 대두 등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유통됐는데 GMO 식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소비자만 모르는 GMO 식품

이는 경실련이 수차례 문제제기한 현행 GMO 표시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 농산물 등을 주요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는 GMO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2조의2). 그리고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제 2014-114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GMO 표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제품의 앞뒤, 좌우를 다 찾아봐도 GMO 식품여부에 대한 표시는 없다. 그렇다면 해당 가공식품은 GMO를 원재료로 쓰지 않는 걸까? 정답은 “모른다”이다. 이는 ‘맞다’, ‘아니다’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답변이다. 하지만 진실이다. 진짜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안다. 수입되는 GMO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업체 역시 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업체가 최종제품 제조업체이다. 해당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입 옥수수, 대두 등은 GMO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모른다. GMO가 어떤 식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소비자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식품 등의 표시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도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치명적인 허점은 GMO 표시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미명하에 슬며시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과도하게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만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²⁾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정부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GMO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함

1. 한겨레 2016년 7월 20일자 기사 “유전자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등장 3년 반...생물·의학은 격동 중” 참고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53102.html)

2. 이 조항에 포함된 용어 “주요원재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의미한다(동 고시 제2조제3호).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14년까지 국내 수입된 카놀라는 100% GMO이다. 한 식품업체가 수입산 카놀라 100%로 제조한 해당 카놀라유는 GMO 식품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량으로 봤을 때 5순위 안에 들지 않았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

“GMO 농산물이 함량 5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GMO DNA 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

“주요원재료 5순위”, “GMO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여부”. 이 두 면제가 모든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단 몇 줄의 조항으로 GMO 표시는 식품에서 사라졌다. 식품의 표시가 불완전해지고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했다.

정부는 경실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해당 면제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GMO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해있지 않은 제품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즉 “GMO 성분검사는 DNA나 단백질 성분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데 식용유의 경우 그 성분이 100% 유지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전자변

형 성분 검사를 하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³⁾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다.

함량 5순위가 아닌 GMO 원재료에 대한 표시 면제 사유는 설명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함량 5순위를 정의하고 있는 “주요원재료” 용어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한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여전히 미스터리다. 정부의 이러한 의문스런한 입장으로 인해 수입산 GMO 옥수수, 수입산 GMO 대두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수입산 GMO 옥수수, 대두, 카놀라로 만든 옥배유, 대두유, 카놀라유 등은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너마저...

문제가 명확하면 개선방안도 명확해진다. 정부가 만든 일방적인 고시를 개정하든,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개정하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달성하면 된다.

정부는 의지가 없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회와 협력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2013년 관련 입법발의를 함께하며 제도개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2015년이 끝나가던 그 날 믿었던 국회에 발등을 찍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똑같이 과도하게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 개정 의

도와 달리 정부의 고시에 있던 치명적인 허점이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담기게 됐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 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거대한 집단 역시 의지가 없었다. 제대로 뭉쳐지지 않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보다 확실한 이익관계가 달린 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했던 걸까!

다시 소비자의 손에

2016년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제 방법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와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고 「식품위생법」을 재개정하는 것이다.

최근 경실련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원들이 GMO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한결 같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으면 예외 없이 식품에 표시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



▲ 지난 7월 20일 경실련은 국회에서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있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직결된 것이다.

국회도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원들이 GMO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내 관심 하나가, 내 의사표현 하나가 식품의 온전한 표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국회는 바로 그런 많은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다시 소비자들에게 GMO표시제도 개선의 키(key)가 주어졌다. GMO가 상업화가 된 20년 동안은 산업의 그늘에 가려져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제는 식품은 물론 원재료까지 그 선택권을 온전히 소비자가 갖게 되는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안전관리 -> 안전성확보 노력 -> 표시제도 현황 페이지 참고



사드 배치와 아마추어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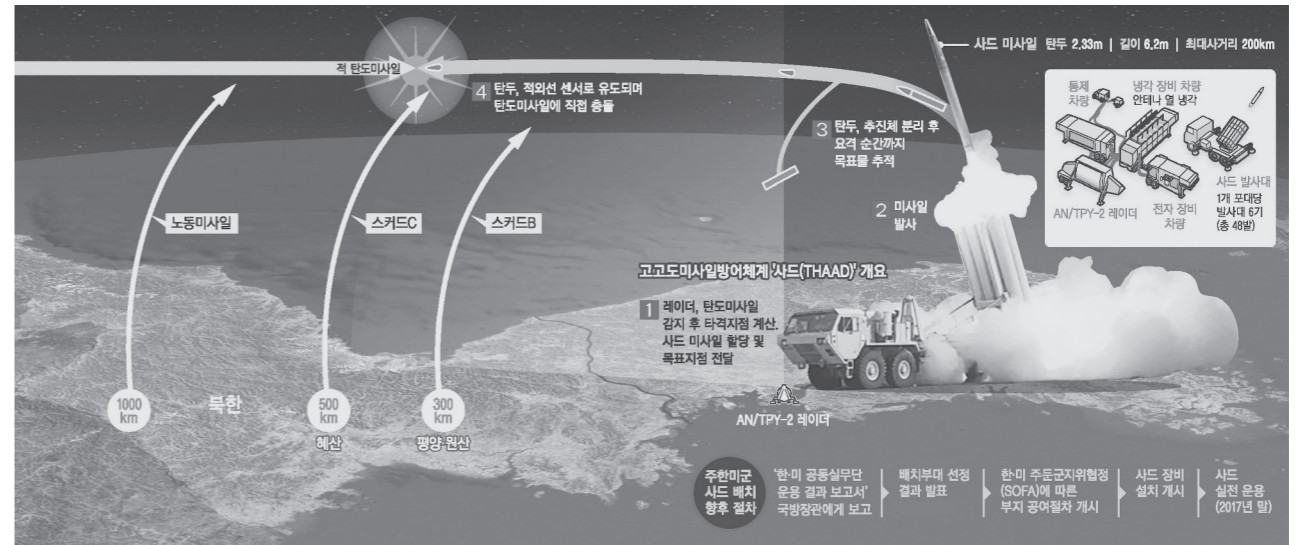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13일 경북 성주가 최종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정성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와 저유시설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군사력도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에서 200km가 넘는 평택과 서울 등 수도권은 방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 남쪽의 대구·울산·경남·부산·제주는 방어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고리·울진 원자력발전소 방어도 힘들다. 국민 과반수를 지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사드 군사적 효용성 크지 않고 주민 안전 확실히 검증 안 돼 중·러 압박 강도 높아질 듯

정부는 성주 지역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한다. 전자파에 의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탐지거리 2000km의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과 600km의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괌에서 구토 증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성주 지역은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미국·일본·괌과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괌과 일본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는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설치되어 있다. 성주는 사막도 해안가도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내륙 지역이다. X-밴드 레이더에서 뽑아내는 전자파는 고주파이다.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 사드개념도_출처 경향신문

길수록 전자파는 높아진다. 하루에 레이더를 몇 시간 돌리느냐에 따라 전자파가 다르다. 전자파는 인체에 조금씩 누적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엉터리 평가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경험했다. 고압선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의 피해 증언도 잇따른다. 객관성이 보장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변 국가의 강경 대응도 우려된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의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 표시도 했다. 사드 배치를 현실화하는 우리 당국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대북용이 아니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공조해서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여 갈 듯하다.

일방 결정 후 '따라오라'는 정부...대외 설득과 대내 소통 미흡 주민 동의·국회 비준 필요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을 한 이

후 국민은 그저 '따라오라'는 식의 통치 행태를 보여 준다. 위안부 문제 합의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사전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123개 중소기업과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사드 배치를 함에 앞서 성주 지역민과 논의하지 않은 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성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간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조약의 성격이 강하다. 방위비 분담에 거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하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이다. 사드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2014년에 정부는 동맹도 중요하지만 국가 이익도 중요하다는 대미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는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면 국가주권론을 내세워서 맞대응하기도 했다.

전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 논란으로 들끓었는데도 보안만을 외쳤다.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까지 대외 설득과 대내 소통이 미흡했다. 정부가 소통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소통을 못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소통을 안 한다면 임기 말까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서두르는 느낌이다. 우리는 주민 동의와 국회 동의를 위해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FTA·사드 문제 등을 일괄 타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드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 한·중 갈등과 한·러 갈등으로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반도가 최첨단 무기의 각축장이 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 구도가 예상된다. 사드 배치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이 칼럼은 2016년 7월 19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신임공동대표 인터뷰2 김완배 공동대표

김지경 회원홍보팀 간사
kongrrong@ccej.or.kr



▲ 2016년 3월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에서 취임사하는 김완배 대표

요즘 경실련은 연일 분주하다. 변화를 위한 크고 작은 시도들이 내외부적으로 부단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를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라 말한다. 경실련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경실련의 분주함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외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위한 도전과 혁신,

그에 따르는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경실련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 누구보다 경실련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바로 김완배 공동대표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위해 도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7월 20일, 경실련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삶에 대한 열정도 뜨거

운 사람 김완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만났다.

Q. 경실련과 인연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대학교 신입생 시절 故 김병곤 교수, 송실대 이진성 교수와 한국사회연구회라는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모임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련반대 시위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 됐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사회연구회 모임과 야학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농업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농업, 농촌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내가 교수가 되고 경실련이 발족할 무렵 이진성 교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함께 경실련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성 교수는 앞으로 경실련이 한국사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NGO가 될 것이고 경실련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나를 설득했다.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경실련과 인연을 맺었다. 경실련 원년 멤버로 정책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친구 따라 경실련에 온 것이 경실련과 인연의 시작이다.

YS정부 시절 한국사회에 불던 민주화 바람과 함께 경실련도 전성기를 맞는다. 회원 수도 늘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경실련의 영향력도 커졌다. 하지만 개인의 출세를 위해 경실련을 사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경실련을 이용하지 말자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그 무렵 경실련 일반회원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후 YS정권이 지나고 상집위원장으로서 다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중앙위 의장까지 역임했다. 중앙위 의장까지 지내고 앞으로 경실련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후원회원으로 남자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올 봄 또 다시 회춘(!)하는 경실련과 함께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새로운 경실련을 위해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수락해 경실련 공동대표로 취임해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Q. 중요한 시기에 다시 경실련 대표를 맡게 되셨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경실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내가 평소 경실련에 대해 생각할 때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3가지가 있었다.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경실련도 이에 부응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과 완결성을 갖춘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소 생각하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두 번째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상근활동가의 처우와 복지수준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실련 상근활동가는 간신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는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식의 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



가능하다. 변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실련이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상근활동가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다. 세 번째로 지역조직은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경실련의 큰 자산이자 힘이다. 중앙경실련과 지역조직과의 긴밀한 연대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중앙위 의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대표가 된 이후에도 지역경실련에 직접 찾아가 활동하면서 중앙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경실련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부단히 하게 됐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어야 경실련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 간의 이러한 긴밀한 연대가 부족하다. 지역과 중앙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설정해 우리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경실련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세 번째 과제다. 나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고 대표직을 수락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이 있다. 경실련 대표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경실련 내부에서도 비전 TF를 꾸려 경실련의 장기 비전을 세우기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TF, 전월세 상한제 TF를 꾸려 집중력 있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들이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평가는?

A. 경실련 내부에서 변화를 위한 시도들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직 상근활동가 복지수준이나 처우문제, 지역경실련과의 관계 설정문제 등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우선 경실련이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새로워야 한다. 지금처럼 오프라인

으로만 시민들에게 접근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통하기 힘들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SNS와 같은 온라인 활동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구체적인 시점과 목표를 설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전이 눈에 보여야 상근활동가와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다. 전략을 구상하고 선택과 집중, 상근근로자 복지개선, 지역 경실련과 연대 등의 당면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한다.

Q. 갈수록 청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교수의 입장에서 최근 청년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A. 결국 일자리의 문제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현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산업화, 기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정 계층, 권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다수를 위한, 공공선에 기반을 둔 규제는 반드시 강화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은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생

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매우 능력이 뛰어난데 한국이라는 테두리에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개인이 해외 일자리 정보를 취득하거나 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보완해줘야 한다. 개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해외 취업 정보들을 정부가 수집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금이나 인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정부가 길을 못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Q. 오랫동안 농업, 농촌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일각에서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고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농촌의 고령화가 더 심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농가소득이 우리보다 높다. 농업은 정년이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된 인구에 걸맞게 소규모 기계를 개발하고 농협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돕는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우리 농촌의 경우는 인구에 비해 토지가 좁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과 자본이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민족은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들여온 비닐하우스

스 농업의 수준은 현재 우리가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다.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만, 쌀은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기초식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자족은 필요하다.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수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과감하게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유용성분을 추출해서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으로 활용해 먹을거리의 차원을 넘어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한다면 우리 농업, 농촌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A. (인턴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개인적인 취미나 출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고마울 뿐이다. 내가 무슨 조언을 하나. 다만,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에 비해 시민단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여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나 자원활동가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

(경실련 회원 분들께) 지금까지 경실련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새롭게 경실련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만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실련에게 많은 지원과 조언,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굳어지고 탄력을 잃을까봐 두렵다. 이러한 것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직이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이 유연성을 잃는다면 그 조직의 생명은 끝난다.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극이 필요하다. 경실련 회원들이 경실련에 자극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그것이 알고 싶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캠페이너
역량강화 강좌 이야기

이현아
국제팀 간사
hyunah.hana.yi@ccej.or.kr

캠페이너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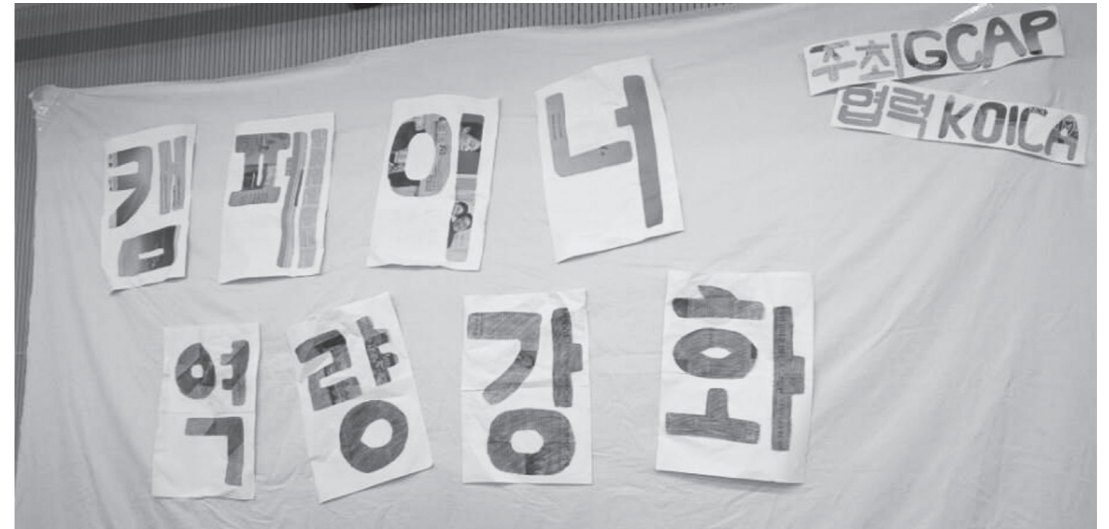
캠페이너 모여라? 활동가들이라면 누구든 크고 작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기서 캠페이너라 하면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의제로 만들어 그 의제를 대중에 확장시키고, 개선하고 해결해나가는 활동가를 일컫는다.

시민운동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긴긴 계획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간주한다. 캠페인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토론회, 대시민 행사 등의 작은 계획으로 구성된다.

우선 캠페인에 대한 정의도 단체마다 다양하고 캠페인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캠페이너들을 모아 캠페인 계획 및 실행 상 공통적인 문제점 및 필요점을 추려야 했다. 그래서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고 단체별 캠페인 성공이야기, 실패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캠페인에 필요한 공통내용을 곱게 걸러냈다.

그 결과 6월 30일, 7월 7일 4개의 강좌를 구성했다. 강좌는 다음과 같다.

날짜	강연내용	강사
6월 30일	1. 아이디어 워크숍: 캠페인 아이디어 분출 조별활동: 아이디어 회의 진행	크리에이트 양정은 컨설턴스
	2. 미디어 활용법: 공익캠페인을 위한 미디어 활용 조별활동: 민노씨와 대화	슬로우뉴스 민노씨 편집장
7월 7일	3. 캠페인 슬로건, 카피라이터의 접근법 조별활동: 캠페인 슬로건 연습	카피라이트 윤수정 프리랜서
	4. 너와 나의 연결고리(캠페인 타깃팅) -조별활동: 캠페인 타깃 정립	그린피스 장다울 캠페이너



▲ 캠페이너 역량강화 강좌 현수막 (1회성 현수막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재활용지로 현수막 제작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아이디어 워크숍이었다. 어디서든 아이디어는 결과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야생의 아이디어를 가공하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디어 가공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방법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아이디어를 내서 가공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제한하는 환경적인 요소를 없애 주었다. Yes, But 스티커를 제공하여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그런데” “아니”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팀원 얼굴에 스티커를 마구 부칠 수 있는 권리 받았다. 그 스티커를 3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캠페인 도구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디어의 제한은 생각의 한계를 갖게 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팀

원들은 하늘이 경계선인 것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이디어를 다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의는 공익캠페인을 위한 미디어 활용법을 진행했다. 영세한 단체들은 캠페인 진행에 비용대비 효과가 큰 온라인 미디어를 주로 사용한다. 강의에서 온라인 미디어 이용 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 등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을 공유해주었다. 더 붙여 슬로우뉴스 등 대안 매체를 캠페인에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주는 센스도 보여줬다.

7월 7일 이어진 강의는 캠페인 슬로건 전략 강의였다. 전문 카피라이터가 좋은 글을 뽑는 몇 가지 비법을 전수해줬다. 우선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의제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연습을 했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던가! 맞다. 새로운 것은 없고 현존하는 것들을



▲ 슬로건 전략 강의 중 수강생과 눈높이 대화중인 윤수정 카피라이터



▲ 아이디어 워크숍 조별활동

새롭게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대방이 모르는 지식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와 같고 무조건적인 차별화는 단절을 불러오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 조별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모은 공통점을 관찰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며 공통점의 차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슬로건만들기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은 반전 찾기였다. 일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한 때 번성한 탄광 마을이었던 유바리는 파산 도시로 전락하고 주민들도 떠나갔다. 이런 유바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유바리 마을 캠페인 슬로건을 만들었다. 돈은 없지만 일본 최저 이혼율을 가졌던 유바리 마을은 “No money But Love” 캠페인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칸에서 국제광고제 그랑프리상도 수상하였다. 캠페이너들도 의제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통점과 반전을 찾아내 좋은 슬로건을 만들기를 다짐하여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마지막 강연은 캠페인 타깃팅이었다. 그린피스와 장다울 캠페이너는 단체에서 혹은 본인이

진행하는 캠페인 사례로 명쾌히 설명했다. 그는 강연에서 애드보커시활동과 캠페인은 구분하였는데, 애드보커시는 로비, 입법과의 과정이라면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둘러싼 권력 및 이익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를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타깃을 꼭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 연령, 시기, 이벤트, 공론화, 의사 결정자 등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주었다.

이 강연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슬픔과 기쁨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후련하지 못한 환경에서 후련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며 애잔한 마음을 (늘 느끼지만 더 감정이입해서 또) 느꼈고, 강연 후 좋은 평가를 보내주신 수강생 분들 덕분에 큰 보람을 느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활동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그들, 우리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고 싶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국가안위와 해양영토의 문제다!

김성아
인천경실련 시민사업부장
xhgodu@naver.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7일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어선 나포와 관련,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가 도망가는데 선 있다고 못 넘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 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가 현안보고를 받던 날에도 300여척의 중국어선이 NLL인근에 몰려들었다.

한편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중국어선은 북한에서 허가를 받아 일하다가 불법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며 “서해안 NLL 지역은 긴장도가 높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충돌이 일어났으면 군사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남북 간에 협정을 통해야하고 한중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지금 상태로는 (어민들에게) NLL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여당, 어민들을 NLL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최상책?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인천 앞바다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동해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2012년 7월 사할린 섬 인근에서 나포한 불법 오징어잡이 선박이 정선 명령을 불응하자 함포사격 끝에 붙잡았다. 호주 등 서방국가들은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대응하고 있다. 최근 소식이다. 아르헨티나 해경 경비정이 남부 푸에르토 마드린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도망치던 중국 저인망 어선을 뒤쫓아 침몰시키고 32명의 선원 전원을 체포했다(3월 14일). 아프리카 24개국도 지난해 12월 중국에게 “불법 조업을 그만하라”고 호소한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달 14일 수백t의 오징어를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억류했다. 동남아에선 멸종위기 종까지 싹쓸이해 논란이다. 타이완 해경은 3월 산호 1만5천kg과 거대조개, 바다거북 3마리를 잡아간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근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베트남도 단속 선박에 기관총을 탑재했다고 전한다.

전 세계가 자국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왜 미온적인 태도로 일



▲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하고 있는 걸까? 인천 앞바다는 우리의 서해, 남해, 동해와 또 다른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서해 5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남북 교전, 일명 '서해교전'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한중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정치·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2015년 한·중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 있던 불법조업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한·중어업협정으로 작금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지만 근본적 협상이 요구된다.

한국·북한·중국 간 충돌을 완충해왔던 해양경찰 부활해야!

결국 인천 앞바다 서해 5도는 한국, 북한, 중국 간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정부도 해군 등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 및 중국과 맞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교롭게 이를 완충해왔던 게 해양경찰이었다. 해상치안의 소임을 갖고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한편 서해 5도 인근의 복잡한 국제관계 문제에도 역할하기 위해 엄존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고 '해체'되고 말았다. 급기야 해체로 인해 '해상 치안'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안전처에 복속되어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처지가 됐다. 배가 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행정을 목도하고 말았다.

인천경실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자 주민들을 지원할 요량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다. 현장주민들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듣게 되고, 피해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경실련의 도움을 받아 공익소송을 준비했다. 게다가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정주여건 마련 방안을 찾고자 했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과 초기부터 제도개선 등을 통한 현안 해결에 협력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어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2014년 11월, 서해 5도 어민들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로 가겠다고 해상상경시위를 벌인 것이다. APEC(중국 베이징)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우리 어장에서 '씩씩이 불법조업'을 자행한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보니 최근 언론을 장식한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어선 직접 나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해 5도 주민도 국민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끌어올렸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서해 5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정치권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경주했다.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인데다가 한중 간 경제·외교적 갈등도 엄존하기에 국가 안위

와 해양영토 수호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생명권과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육지 짓은 모를 거야"라는 한 어민의 푸념이 귀가를 땀돈다.

이참에 해양을 안고 있는 지역경실련들이 공동으로, 정부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으로 도서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그리고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육상 치안만큼 해상치안도 중요하다. 해양경찰의 부활은 정부 조직의 정상화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한국·북한·중국 간의 국제적 문제 해결에도 절실하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는 국가안위와 해양영토의 문제다. ☹☹



지역이야기

2016년 7월호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ok@ok.or.kr



▲ 이시종 충북 도지사

- 2000년부터 시작한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지만 ...
- 단체장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데, 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까?

충북·청주경실련의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역사는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9월 민선 2기 충북 지역 모든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발표한 것이 출발점

이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약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 으레 안 지켜도 되는 것쯤으로 여겼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후 단체장 후보들은 공약을 만들 때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말이 정착될 정도로 단체장 공약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약

목록과 이행 정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한다. 사실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는 상근자 서너 명의 작은 시민단체가 하기에는 일명 ‘가성비’가 떨어지는, 힘은 많이 들지만 티는 별로 안 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어도 되겠구나.’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 단체장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다는데, 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여건은 그에 비례해서 나아지고 있지 않은 걸까? 우리는 이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 충북도지사 :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충청북도는 민선 6기 2년을 앞두고 자체평가를 통해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높은 이행률은 해석방식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95%란 수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 수는 237개, 총사업비는 19조 5,500억 원이다. 개수가 많고 각 공약별 사업비와 난이도가 달라 단순한 이행률로는 공약사업 추진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다.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비교해 보아도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 모두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 더군다나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도비 사용은 전체 사업비의 5.5% 밖에 되지 않는다. 충남(152개, 14조 774억), 대전(95개, 4조 7,216억)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

와 사업비는 매우 많고 자체예산 사용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연 이것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진 이유는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SOC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이다.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55%, 10개 사업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 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특정 사업에 쏠려있어 대다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 맞춤”
-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 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춤’ 정도였다. 또 각 분야별 특정 1~2개 공약이 (대부분 건물과 관련됨)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소방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미할 뿐이다.

- 청주시장 : 사업비 · 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 역시 도지사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청주시는 124개 공약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 중 70개, 미착수 · 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우선 청주시장은 사업비 · 사업기간이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되었다. 무언가를 평가하려면 당초 계획 대비 얼마를 했고 얼마를 못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청주시장 공약은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총사업비가 6천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 · 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 · 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지금의 청주시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옛 청원군과 통합한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사업비만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장 공약 역시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사업비/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었다.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 5개로 확대하면 66%, 10개로 확대하면 81%가 된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전체의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공약사업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청주시장의 공약은 개수와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공약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단순한 평균 이행률만으로는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회적 약자, 서민 생활/안전에 관한 공약 역시 거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공약사업은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약 자체가 도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과 일치해야 의미가 있다. ☺☺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

양시경
제주경찰청 공익지원센터장



▲ 제도도청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입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지난 7월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옛 방송통신대건물에 대한 청원심의회에서 제주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제주도는 2006년 교육부의 자산이었던 옛 방송통신대건물을 제주도 소유공유지와 교환해서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안전진단해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D등급 판정을 내렸다. 마치 건강하게 생활하는 80대 노인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죽어야 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흡사한 행위이다.



▲ 옛 방송대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제주도 공무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제주도민을 속이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2006년도에 이 건물을 소유하기로 결정할 때와 2008년 수천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에는 상당기간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책결정이다. 제주도는 2014년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D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는데도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주민정보교육센터로 이용해왔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이 건물이 아직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정보교육센터로 이용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진단 용역은 믿을 수 없는 용역이었음을 제주도 공무원들 역시 입증해주었다.

둘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건물은 제대로 시공이 될 경우 1백년 이상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되거나 유럽에 5백년 된 건축물이 문화 역사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이 60년 건물이라서 철거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의심된다.

셋째, 이 건물을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D등급으로 결정한 용역보고서를 서울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니 “진단에 적용된 기준은 2009년 구조기준으로 55년 된 건축물은 NG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건축 당시의 구조기준으로 재검토할 경우 현재 진단보고서상 문제가 된 부분들은 당시 기준에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문제가 되는 누수와 탄산화부분은 건축물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용역을 수

행한 업체는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D등급으로 결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D등급으로 몰고 간 개연성이 크게 느껴진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엉터리로 이루어진 용역을 고집하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안전진단 용역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규명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탐동매립개발 과정에서 엉터리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처절하게 경험했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헐세를 들여서 철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무참하게 철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





2016년 여름 경제정책팀 인턴활동 후기



김고운
경제정책팀 인턴

2016년 5월 한국으로 귀국한 바로 그 주 경실련으로 처음 찾아오던 길이 2개월이 넘는 인턴생활이 끝난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다. 혜화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경실련을 찾으려다가 내가 경실련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하진 않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 중 한국에 돌아와서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찮게 경실련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시민단체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정말 무작정 자원활동을 신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와서 놀랐었다. 그렇게 5월부터 경제정책팀에서 인턴생활을 하게 됐고 어디서든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내가 속해있던 경제정책팀에서는 한창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경영을 전공하면서 필수 경제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경제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해외와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비교하는 자료를 찾는 업무는 쉽지 않았다. 모르는 용어도 많고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배경조사를 하고, 입장정리를 하며 본격적인 활동들도 함께하다 보니 뉴스를 볼 때 연관성을 찾기도 더 쉬워졌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경제정책팀 업무 이외에도 잠깐씩 다른 팀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 중 하나다.

인턴활동을 하며 여러 간사님들과 이야기하며 느낀 것은 다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나는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될 때마다 분노를 느끼긴 했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행동할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경실련에서 활동을 하며 그 동안의 내가 부끄러워질 만큼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 인턴스케치_김고운

경실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꼽으라면 여러 차례 참가했던 기자회견과 캠페인들이다. 처음 옥시 기자회견을 나갔을 때는 기자들을 보는 것도 낯설고 뭘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내 기자회견이 익숙해졌고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캠페인에 참가해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경실련에서 진행한 다양한 강연들을 들었던 일련의 경험들은 경제사회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터라 더 보람 있기도 했다. 다른 인턴들보다 일찍 인턴활동을 시작했고 일찍 끝내게 되어서 다같이 활동할 수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방학 경실련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새롭고 재미있었다. 혹시나 내가 그저 짐만 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처음으로 OECD보고서 및 다양한 경제 연구결과를 번역하고 정리했다. 국회토론회도 가보고, 기자회견도 참여해보고, 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용 웹툰 콘티도 짜보았다. 간사님들, 팀장님, 그리고 다른 인턴 분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친절하게 잘 챙겨주셔서 경실련을 떠나는 게 아쉽고 앞으로 많이 생각날 것 같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번 여름 동안 경실련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실련에서의 했던 경험과 만난 인연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



2016년 여름 국제팀 인턴활동 후기



김세안
국제팀 인턴

평소에 한국 사회 및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업과 오랜 유학생 활동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내가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경실련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한기 국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경제팀과 국제팀을 고민하던 중 저의 배경과 영어 능력이 국제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국제팀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 날 국제팀의 이현아 간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 주셔서 경실련 인턴 생활이 즐거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턴 첫날 아침에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던 '인공 지능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강연에 참석하지 못해서 과연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에 저도 모르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인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고 각각 다른 전문 분야에서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경실련의 분위기가 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국제팀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사회의 임금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간사님께서 보고서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관련 자료 조사나 번역 같은 도움을 부

탁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저에게 선뜻 보고서를 작성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한국의 노동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겨주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자료 조사를 하고 관련 문학을 찾아보며 보고서를 하나하나 채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작하기 전에 막막했던 보고서가 어느새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그간 무지했던 한국 노동구조와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현재 한국의 다양한 불평등 실태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활동 중 하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달 반 동안 인턴을 하면서 무려 열 번 정도의 기자회견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며 국제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권익·소비자팀 그리고 경제팀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턴들에게도 기자회견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팀의 이슈에 대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다른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자회견을 참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경실련을 보면서 '아,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외면하는 문제도 내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두 달 반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경실련을 떠난 뒤에도 뉴스를 접하는 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별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 이야기를 접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찰하며 내 생각을 가지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



시민운동 종합정론지의 역할을 다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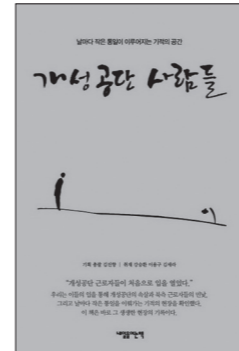
요즘은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신문과 방송 뉴스를 보지 않아도, 정보와 자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털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어볼 요량으로 의미 없고 무가치한 기사들을 쏟아 내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월간경실련은 그러한 경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월간경실련 구독자는 더 날카롭게 사회 현안에 대해 분석해주고, 독자들에게 쉬운 이해를 더해주는 것이 독자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실련의 전문성을 더욱 살리되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의 힘은 회원을 포함한 시민들입니다. 경실련의 운동 내용과 현안을 분석해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월간경실련을 통하여 독자 즉 경실련의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방의 내용 전달 창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경실련의 운동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운동이 일부의 전문가와 활동가에 의해 굴러가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월간경실련이 표방해온 시민운동 종합정론지로서의 역할은 다하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변화의 예일 것입니다. 또한 경실련의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처럼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합니다. 지금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말입니다. 월간경실련이 시민들의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뺨 뚫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월간경실련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남과 북 그리고 중간지대, '개성공단'이 필요하다
- '개성공단 사람들(김진향 저)' 읽고.

정유림 정치사법팀 간사 square520@ccej.or.kr

분단체제 속 남과 북은 대립 속에 있다. 뚜렷한 이분법 속에서 중간지대가 자리 잡을 곳은 없다. 남북 간 유일한 교류의 장이자 경제협력의 모델인 개성공단은 한국사회의 중간지대였다. 지난 2월 북핵 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국사회는 또 다시 남과 북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다. 북핵 실험이 그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에 대해 정부가 즉흥적이고 유난스럽게 대처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가 온당한 방법일까?

《개성공단 사람들》은 남과 북이 아닌 중간지대로서 개성공단을 바라보게 한다. 책 속에서 개성공단 근무경험이 있는 남측 주재원들이 직접 생생한 개성공단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맹'이라고 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 무지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 측 기준과 관점, 가치관에 입각해서 재단하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자칫 호도되어 있는 남측의 '퍼주기식'이 아닌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인력이 공생하는 남북경협 모델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개성단가'라고 불리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은 인기가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중이었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측에 시장경제의 학습장이기도 했다. 입주 초기에 사회주의체제에서 학습된 북측 근로자들은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인센티브를 달라고 할 정도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터득한 것을 보여줬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남북이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발전을 모색하려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 책을 기획한 김진향 교수는 "남과 북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 점은 분단체제가 강요한 획일적 사고와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선악적 구분의 폐해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나 또한 이 범주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이 우리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양쪽으로 넓고 깊게 갈라진 틈을 메우려면, 중간지대를 두텁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 상호간의 중간지대는 바로 개성공단이다. 합리와 이성에게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의 청사진을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



소유가 정당일까요?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저, 이희재 역, 민음사

김용석 사회정책팀 간사 cumdo@ccej.or.kr

소유의 종말이란 제목은 솔직히 마음에 와 닿는 말은 아니다. 내 것, 네 것에 익숙한 오늘날, 소유와 종말이라는 단어의 결합은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다.

저자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시대에 생산 과정, 장비, 상품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용도 폐기되므로 장기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리하다고 말한다. 갈수록 짧아지는 혁신과 신제품의 등장 주기로 소유란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본 설비를 구입하기보다는 필요한 물리적 자본을 빌려 쓰고 단기 비용이나 경상비용으로 처리한다. 일반 시민들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1/3은 자동차 회사나 대리점에서 빌린 것이고 특히 고급승용차의 50%, 재규어XJ모델의 경우 90% 이상은 임대 자동차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가구의 33%가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 오늘날 고객이 구입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접속권이다.

저자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유보다 접속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의 모든 시설들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접속의 개념은 단순히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괄한다. 인터넷은 물론 자동차, 주택, 가전제품, 공장, 체인점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 접속이다.

실제로 소유에서 접속으로 전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요즘 기업에게는 접속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경영전략이다. 현재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관심, 고객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된다.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지상 과제였지만 이제 기업은 고객의 시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생활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늘 접속과 직결된다. 문제는 지금의 문화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와 문화의 일원으로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권리를 누리든지 아니면 배제 당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현상을 우려하며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저자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자본주의의 발달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다보면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만만캠페인

경실련 최저임금 TF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 '푸르딩당'한 1만원 지폐와 함께 찍은 인증샷으로 #만만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GMO정보공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체별 GMO 수입 현황'을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한결같은 대답은 "절대 비공개!!!!!!" 왜???????

■ 반부패 및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검사 출신 고위관료들의 도를 넘은 일탈과 전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공규현 | 항상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래 | 우리나라 건강하고 맑은 나라 즉 선진국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디딤돌이 되기위해 노력해 주세요.

노서진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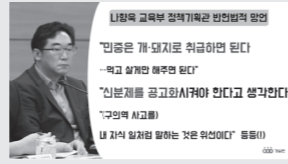
2016. 06

- 06.08 정부의 부실업종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 06.10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06.20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06.21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 06.22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①]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 06.24 [집중행동주간 성명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 06.27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②]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 06.28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③]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06.29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④]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회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06.30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⑤]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2016. 07

- 07.0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07.04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⑥]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및 최저임금인상 해외사례 발표
- 07.05 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땀질식 처방 철폐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해결책 제시하라
- 07.06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⑦]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 07.08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07.11 민중 개·돼지로 비하한 나향욱 정책기획관 즉각 파면하라
사드 배치는 막대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할 것



- 07.12 [집중행동주간 기자회견⑧]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07.13 [집중행동주간 성명②]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7.15 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 07.17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7.18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 07.20 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07.26 [기자회견] 반부패 및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94명, 가입일 : 2016년 6월 8일 ~ 8월 4일)

강경호	곽윤호	김성래	김창희	담당자	손혜정	오주호	이금숙	이재원	조순홍	최윤제	황병열
강명천	구범림	김성호	김탄일	문상철	송상연	오현주	이로사	이주석	조영화	최찬호	
강유동	길호양	김수현	김태성	민경환	송은우	우동진	이봉주	이현녀	조오현	최형섭	
강현숙	김관식	김수환	김태수	박금자	송학동	유성찬	이상조	이후삼	주영숙	함승희	
고기준	김미선	김영종	김태연	박상수	신동엽	유임근	이상진	임성태	진효상	허정호	
고재국	김민구	김예진	김해영	박하나	신상천	유해영	이선미	전재석	차지승	홍경남	
고형석	김병기	김용일	김효근	반호섭	신은희	윤상근	이선희	정선유	채호진	홍순필	
공규현	김상태	김유미	김희숙	배건웅	신정원	윤상화	이상원	정유림	최미근	홍은선	
곽덕신	김석진	김인자	노서진	손미란	안병록	윤형식	이영지	조경주	최선호	황덕성	

중앙경실련	경민수	군산경실련	김경민	김대현	김병호	김세진	김왕식	김인선	김종섭	김찬석	김태훈
	계충미		김경배	김대호	김보경	김소라	김용남	김인숙	김중우	김찬형	김평진
(주)아이티엔티	고강석	권경우	김경수	김대훈	김보라미	김소희	김용석	김인영	김종찬	김찬호	김하나
	강경수	고경일	권구혁	김경수	김동영	김보람	김수영	김용섭	김민태	김종혁	김창균
	강내원	고영희	권규황	김경아	김동욱	김복환	김숙희	김용숙	김일수	김주목	김창범
	강덕순	고 읊	권기범	김경준	김동을	김봉진	김순임	김용식	김재구	김주영	김창식
	강명구	고은진	권동현	김경철	김동호	김 심	김승보	김용직	김재구	김주영	김재윤
	강문희	고인수	권득용	김경환	김래관	김삼용	김시연	김용찬	김재길	김주종	김 천
	강민구	고지석	권상용	김관영	김만수	김상겸	김애자	김용철	김재일	김주현	김 철
	강상구	고진강	권상주	김관용	김만호	김상균	김양규	김용태	김재하	김 준	김철주
	강선미	고행산	권상현	김광배	김명균	김상영	김양수	김용하	김재화	김준배	김철호
	강성일	고형석	권성윤	김광수	김명기	김상우	김양진	김용호	김재환	김준식	김철호
	강영식	공병욱	권순범	김광현	김명묵	김상현	김연주	김우비	김정국	김준영	김철홍
	강영훈	공정표	권순용	김광훈	김명애	김상희	김영미	김원석	김정돈	김준한	김철환
	강용수	공진하	권영준	김국주	김명임	김생수	김영복	김원태	김정수	김준호	김충환
	강원호	곽기훈	권영진	김귀해	김명철	김서현	김영선	김유룡	김정신	김지연	김치수
	강은현	곽남준	권오진	김규범	김명환	김석환	김영섭	김유신	김정욱	김지영	김태균
	강일환	곽복률	권윤정	김규훈	김무준	김선필	김영순	김유정	김정원	김지현	김태균
	강재혁	곽새별	권율학	김근수	김문환	김선화	김영실	김유진	김정현	김지혜	김태균
	강주현	곽지웅	권일민	김근철	김미진	김성민	김영은	김유찬	김정호	김지호	김태수
	강지영	곽효석	권정아	김근초	김민수	김성수	김영재	김유환	김정호	김진구	김태수
	강지현	곽희남	권준기	김기숙	김민정	김성수	김영주	김윤기	김정호	김진만	김태완
	강창길	구경이	권준석	김기열	김민주	김성숙	김영준	김윤두	김정훈	김진명	김태중
	강창구	구길두	권준우	김나리	김병각	김성종	김영준	김윤석	김종걸	김진석	김태진
	강창균	구태영공제회	권 찬	김남덕	김병구	김성태	김영철	김윤식	김종근	김진섭	김태현
	강철규	구성찬	권철민	김남훈	김병수	김성필	김영철	김 윤	김종덕	김진수	김태현
	강철승	구수정	권태환	김대균	김병수	김성훈	김예승	김은경	김종록	김진아	김태형
	강태호	구자홍	권항년	김대선	김병수	김세정	김원래	김은영	김종묵	김진현	김태호
	강현신	구혜인	권혁민	김대성	김병주	김세종	김원배	김의수	김종민	김진호	김태호
	강혜정		김경모	김대중	김병학	김세종	김원욱	김인근	김종배	김찬동	김태훈

김호연	문미란	박상성	박재갑	박호걸	서한송이	송하동	안용식	오충현	윤대현	이규철	이상우
김홍관	문상준	박상인	박재완	박호영	서한이랑	신규철	안인화	우종복	윤득구	이균성	이상윤
김홍규	문석진	박선희	박재익	박홍순	석기영	신근택	안정혜	원대환	윤상균	이근식	이상윤
김홍업	문세영	박성배	박재천	박후근	석철수	신동민	안종범	원동재	윤숙자	이근태	이상진
김효선	문소상	박성용	박정교	박 훈	선동수	신동민	안지현	원동환	윤영근	이근환	이상철
김효원	문인섭	박성용	박정민	박희령	선종국	신동선	안진걸	원영진	윤영천	이금희	이상현
김희연	문장협	박성정	박정석	박희선	설원식	신동애	안철원	원제환	윤윤식	이기승	이상희
김희영	문지원	박성혁	박정식	박희연	설창인	신동엽	안현구	원종호	윤은선	이기우	이석규
김희철	문차호	박성훈	박제화	방승범	성광식	신동조	안효정	원혜영	윤은주	이기용	이석기
나권일	문태현	박세권	박종규	방정해	성금성	신동진	안희숙	원홍식	윤인오	이기종	이석범
나명희	문현정	박세원	박종근	방중수	성병화	신두철	안희정	유관영	윤일성	이기현	이석제
나병현	문 희	박세현	박종석	배승철	성 신	신봉기	안희철	유국철	윤정섭	이기호	이석진
나상민	민남미	박수행	박종선	배영환	성윤숙	신상진	양광희	유기선	윤종빈	이낙원	이선신
남기원	민병욱	박순기	박종소	배유아	소경섭	신승연	양대규	유기찬	윤종식	이남경	이성계
남상권	민선옥	박술아	박종원	배인명	소진성	신영철	양두석	유기청	윤지원	이디해	이성구
남영진	민희숙	박승배	박주은	배장수	손건일	신영철	양부식	유기현	윤진철	이대영	이성근
남원호	박건영	박승상	박준수	배중석	손무길	신원기	양석영	유남식	윤한필	이덕희	이성복
남재걸	박경서	박승욱	박준영	백요한	손봉호	신용규	양연식	유덕열	윤효상	이동석	이성욱
남현주	박경애	박승진	박중철	백은정	손성일	신우현	양원표	유동진	은영수	이동석	이성원
남호원	박경준	박양제	박지원	백정숙	손승태	신은정	양윤숙	유록수	유유정	이동석	이성재
남호현	박계원	박영규	박지은	백진현	손우영	신재우	양인준	유영진	이갑수	이동주	이소영
노연경	박광현	박영규	박지혜	변동철	손재운	신정무	양창우	유병상	이갑수	이동준	이승수
노재훈	박기영	박영기	박지호	변상해	손정아	신지영	양혁승	유병서	이강운	이동한	이수연
노정호	박기창	박영남	박지호	변재근	손종보	신철영	엄원종	유 송	이건호	이동호	이수영
노진주	박기철	박영민	박지환	변준섭	손호중	신현호	엄인수	유인상	이경도	이만호	이순기
노희철	박기환	박영수	박진아	변창우	손희경	심순혁	엄홍길	유인환	이경수	이명진	이순배
라윤홍	박기훈	박영웅	박진홍	브이앤브이(주)	손희준	심충진	여은희	유일용	이경숙	이명천	이승대
류도암	박남규	박영철	박창민	서경호	송기민	심혜정	여해경	유장연	이경우	이명훈	이승섭
류동훈	박노건	박영환	박창임	서순탁	송기성	아름다운의원	염규석	유재민	이경준	이모세	이승우
류명현	박노현	박용석	박철수	서승완	송다겸	안경숙	오다현	유재욱	이경태	이민아	이신호
류시문	박두영	박원규	박치우	서영덕	송미영	안규창	오동엽	유재중	이경희	이범재	이애화
류지성	박미나	박윤수	박태선	서완석	송민정	안기정	오상엽	유재혁	이근섭	이병관	이영란
류형욱	박미선	박윤희	박태영	서용욱	송병록	안병노	오상준	유종성	이광섭	이보실	이영림
류화근	박민준	박은아	박한용	서우석	송수영	안병익	오세정	유평준	이광용	이봉숙	이영백
마경화	박병오	박은준	박한호	서윤석	송용석	안병준	오세호	유해신	이광월	이봉훈	이영범
마미영	박병일	박은현	박행우	서은경	송원기	안상용	오순택	유항림	이광택	이삼열	이영욱
맹성렬	박보성	박응순	박현진	서정일	송은우	안세영	오승훈	유희숙	이광필	이상룡	이영음
문경식	박상기	박의용	박형근	서종대	송인섭	안영훈	오영호	윤건수	이광현	이상범	이영중
문광기	박상대	박익중	박형삼	서종철	송인윤	안예인	오창환	윤경숙	이규용	이상엽	이영준
문금희	박상렬	박인선	박혜란	서직원	송태교	안완용	오제명	윤기복	이규용	이상엽	이영채



이영현	이종욱	이훈섭	장혜령	정연태	정혜승	진영수	최유영	한광덕	홍창기	김성수	이재문
이영호	이종윤	이희종	장희근	정영만	정혜승	진유식	최윤재	한국산업비지연공제조합	황경복	김세웅	이정식
이용만	이종후	인명진	전기호	정왕규	정희성	진중남	최윤진	한동운	황기명	김 영	이제선
이용배	이종훈	임건욱	전대홍	정용인	정희창	차삼준	최은식	한상훈	황도수	김재령	이주희
이용선	이주아	임영호	전명석	정용택	조강희	차은상	최은진	한석웅	황선용	김재익	이창수
이용승	이주하	임서구	전병순	정용화	조건영	채민성	최은철	한선아	황선원	김정인	이현주
이용한	이주형	임성희	전병식	정운수	조경민	채예정	최인숙	한소람	황신영	김정철	이희승
이운향	이준영	임세은	전봉양	정원철	조광희	채원호	최인호	한승구	황신준	김종길	임경수
이원식	이지영	임영환	전봉진	정원희	조규홍	천기웅	최 일	한승호	황영미	김형욱	임창규
이원재	이지영	임용기	전상룡	정윤영	조병익	천대웅	최장원	한승호	황유경	김호현	임형백
이원재	이지훈	임용섭	전상욱	정은영	조상호	천민승	최재용	한연하	황이남	나인수	장명진
이원희	이진경	임장원	전성철	정의곤	조성태	천병우	최정표	한영관	황이숙	노두승	전은호
이윤규	이진영	임정규	전영진	정인호	조성희	천상렬	최종석	한용석	황인구	노동래	정성훈
이윤배	이진원	임종필	전용배	정일용	조성희	천승걸	최종일	한용환	황인선	도선봉	정애리
이윤상	이찬영	임철티	전용일	정재은	조순열	최경순	최종철	한홍열	황인찬	류성룡	정인환
이윤호	이창엽	임태영	전우영	정재진	조연정	최광규	최준용	함동균	황주란	류중석	조돈철
이은기	이창효	임희운	전장호	정정래	조영록	최광현	최준혁	함동균	황진영	박경남	조재형
이은재	이창희	임희청	정경욱	정정호	조용기	최다니엘	최종길	함두호	황철진	박상위	최강림
이의영	이철우	장경완	정권용	정재용	조은호	최다정	최지한	함형욱	황호식	박성우	최두호
이익모	이춘수	장동민	정덕익	정중원	조일흠	최덕천	최지현	허남중	황효열	박영웅	최명철
이인영	이태영	장문호	정명채	정주연	조재연	최덕호	최지훈	허병권		박인순	최윤정
이일권	이태용	장미은	정미숙	정준수	조정근	최명희	최창배	허 석	도시개혁센터	박정윤	최정우
이재걸	이태진	장병호	정미화	정중식	조종철	최 민	최창호	허수범		박천우	허동익
이재림	이학수	장보름	정범석	정진민	조준범	최범식	최철화	허원철	강순주	박희정	하상우
이재욱	이한길	장석림	정병순	정찬식	조준형	최병호	최태영	허익배	강준모	배용규	함승희
이재완	이한민	장석춘	정병오	정창률	조진만	최봉문	최현준	허정준	고일두	서민호	
이재운	이한섭	장승진	정상룡	정창수	조진수	최석준	최호영	허지영	곽 도	서순탁	통일협회
이재은	이현미	장심영	정상미	정창운	조진오	최성수	최호용	현승근	곽충삼	신행숙	
이재환	이현석	장영식	정석희	정태근	조한희	최성실	최홍식	형성훈	구자훈	심재민	강만성
이정남	이현성	장영오	정선철	정태명	조현철	최성주	최홍엽	홍광선	권영진	양우현	강은석
이정성	이현숙	장영환	정선혜	정태민	조형준	최성현	최희수	홍대식	권 일	오세형	강화명
이정영	이현재	장옥숙	정선화	정태성	조희근	최성훈	최희수	홍도천	김경희	윤재용	고석주
이정현	이형세	장용근	정성봉	정태완	주관수	최수진	최희준	홍미미	김광만	이동근	고유환
이정희	이형희	장원규	정성심	정태철	주상희	최수진	추동균	홍성균	김금옥	이만희	곽일환
이정희	이호경	장유리	정세진	정택수	주용학	최승섭	크레딧책임(주)	홍성환	김기성	이명수	권수복
이종건	이호섭	장유환	정세훈	정학수	주익철	최영식	탁 민	홍순영	김덕기	이병준	김근식
이종규	이호욱	장은미	정승상	정한균	주정은	최영철	프라이머디스트리(주)	홍중학	김도영	이순배	김동규
이종길	이화영	장중철	정승준	정해석	주찬식	최은아	하상준	홍준표	김동식	이양재	김동환
이종범	이화주	장철기	정승화	정형제	지동익	최원영	하용호	홍준현	김미경	이유미	김민식
이종수	이 훈	장형환	정연섭	정혜경	지정희	최원천	하현아	홍진구	김석기	이은재	김병조

김성수	선월 몽산	최호창	시민권익센터	김봉래	이지은	김상천	박대기	육충석	진성우	김인수	이상우
김성호	송정호	추재훈		김석래	이진아	김석준	박동진	우정숙	진영세	김정제	이성락
김세준	신경화	한광수	김강준	김선정	장선애	김선심	박명옥	원순실	진휘재	김철년	이성민
김수동	신영옥	한정훈	김상헌	김재부	전규화	김성진	박성호	원순태	최삼주	김철수	이성조
김용수	신정웅	한준구	김태룡	김재준	정석중	김숙정	박수정	유자상	최선중	김태열	이원희
김용현	신종성	홍명근	나태균	김정근	정세환	김승권	박소옥	유천업	최쌍중	김해숙	이유형
김은수	안춘훈	황지연	대호관세사법인	김중남	정의호	김양곤	박소옥	유태영	최양오	김현근	이인형
김장철	위정희			김진숙	정의훈	김영우	박애숙	윤강권	최운용	김홍규	이정윤
김재기	윤영전	경제정의연구소	박승민	김진욱	정현석	김용운	박용안	윤길정	최운숙	김홍기	이창안
김재원	윤태룡		박인동	김형경	조남환	김원용	박인근	윤정미	최정환	도형수	전용범
김정웅	이기자	강명철	서경수	노영성	조무현	김잠이	박준기	이경희	최창식	류창열	전진대
김정진	이승규	곽수근	신희권	류형춘	조영미	김정주	박추홍	이광재	추현철	미태근	정병열
김정현	이우영	곽의영	심제원	박윤남	진수환	김정택	박태원	이신학	한기수	문성현	정병우
김제천	이익현	김소연	유주상	박인재	최규천	김종태	반영진	이상귀	한은진	박귀룡	정석호
김주호	이장한	김지환	이대순	박종시	최복규	김종혁	반창오	이상미	한인숙	박봉찬	정영권
김진영	이정호	김 혁	이덕우	박지호	최송길	김종현	배기수	이상천	한장용	박성준	정진철
김진환	이정우	노영록	이명근	반태연	최순희	김진성	배동주	이성호	함미경	박임관	제갈음미
김창석	이종수	문인철	이순기	배정순	최승룡	김창집	백세정	이숙자	허추구	박종희	조덕수
김태환	이종인	박상안	이지연	서은주	최승준	김충곤	백순환	이양식	허희경	박찬진	조봉래
김학성	이진만	박익범	이 진	송문길	한동준	김판열	백승일	이장명	현정임	박태광	조영화
김형만	이현희	백승호	이창수	송민석	한성민	김판희	서주중	이장표	홍성태	반종국	지병구
노귀남	이화용	백중호	이태호	송재석	홍용표	김필성	손성미	이정택	황정득	배철용	최병철
당명숙	임명선	성호준	장 영	신미영	홍진원	김한기	손은희	이창훈	황정원	서홍기	최삼호
류현정	임을출	손창민	정진영	신성진	황상철	김한표	손정식	이철용		손영태	최 암
문행규	임홍승	송은학	전종찬	신승춘	황은남	김현호	손진일	이형로	경주경실련	손용락	최임석
박경서	장인석	여은미	정경수	심규만	강경수	김호영	송수영	장길호		신수철	최진건
박금해	장형원	오미단	조영관	심윤보	강성배	김호일	송오성	장남수	강지명	심정보	최춘자
박미라	전귀정	윤언철	조 현	심현섭	강정효	나기석	신미경	장석주	곽정섭	안경복	최현익
박영희	전미옥	이덕호	추승우	양창훈	강지은	나양주	신미애	전갑생	권기훈	안재철	최홍배
박용주	전영선	이승훈		원경숙	강학도	남기원	신용호	전기풍	김경대	양철영	하재훈
박은주	정동욱	이혜란	강릉경실련	윤도현	경명자	남덕희	신진영	정보건	김경호	오영석	한순희
박주승	정명숙	임호창		윤성원	고영주	남원식	신진홍	정석윤	김기석	우종철	휴먼뱅크(주)
박준우	정명자	정길채	강남일	이광중	권민호	남희정	안미나	정종화	김기중	우호식	
박준형	정승훈	정홍준	고석태	이귀녀	권형준	노재남	여정애	정지영	김동명	윤병길	광명경실련
배인교	정창현	천미림	구광범	이숙희	기산종합건설(주)	노재천	오성관	제문규	김만근	윤정수	
배종근	조광환	하능식	권상동	이요한	김경섭	노재하	오성주	조병호	김만규	이 관	강 님
백인용	주석부	홍창식	권오석	이윤일	김경수	류금렬	오정림	조오현	김양선	이동호	강성철
백학순	차승주	황은경	김남두	이정임	김민수	문상필	육근호	조원배	김영식	이미경	강신재
변상호	최우진	황정호	김남영	이제영	김상기	문철봉	육방호	조하영	김영태	이상기	강욱영
서관승	최명규		김동명	이주석	김상일	박광호	육용식	주재빈	김영화	이상수	강욱희



강주례	김윤재	박성영	신혜정	이상봉	정지원	홍진호	김순재	박수인	신은화	이정량	정환채	강명천	박재욱	이태동	홍기원	정경조	백종일	최영미	김영모	엄봉훈	전성훈	곽영교	박경오
강찬호	김윤호	박승원	신혜진	이상숙	정하준	황동식	김양두	박양우	신은희	이정학	조광득	강승수	박정구	임은기	조용석	신명순	최재웅	김용철	엄인용	전영명	구남혁	박근영	
강희규	김은진	박옥남	심혜진	이성진	정학균	황인란	김양지	박영길	신재안	이창호	조교영	강신웅	박주영	임재권	군포경실련	조재용	신상천	한성식	김윤호	에스제이건설(주)	전재호	권철명	박기남
고영원	김 정	박은경	안경애	이승재	정해경	황재연	김영규	박옥란	심재훈	이학균	조성식	고영호	박창재	임주석	차숙희	신순철	한재혁	김재범	여은상	정경선	김기수	박상훈	
고완철	김정미	박재금	안철환	이승봉	정해선		김영길	박이화	안생물	이형호	조재곤	구자근	박항진	장기태	곽윤열	최경용	심상용	한해경	김종웅	여택동	정문정	김기오	박성진
고재원	김정숙	박재철	양금석	이승희	정희균	광주경실련	김영묵	박종근	양동윤	이호진	조재선	권구일	박희중	장도익	국정아	최충식	안재범	허우섭	김지현	유성근	정성윤	김동선	박용직
고형복	김종임	박재희	양승오	이양희	조범상		김영범	박종렬	양명희	임가춘	조현지	권 보	배인호	장문석	권영훈	하은호	안호열	홍석만	김진숙	유성호	정순천	김문영	박종대
곽 은	김종진	박정욱	양정현	이연주	조상희	(유)용진에너지	김영환	박준근	양진환	임동훈	주호연	권순서	백승국	장세광	김대욱	한성수	양영재	황인문	김진호	유영환	정은숙	김병국	박종석
구교형	김진경	박종기	양철원	이연숙	조아라	(주)대한가스산업	김용태	박찬숙	엄창수	임성태	지명순	권순형	변창우	장종길	김동별	호희국	여중석	황인순	김창수	유왕근	정창길	김상환	박준혁
구본순	김진숙	박종미	오명희	이영신	조양희	(주)영암마트	김은영	박창기	여상구	임숙경	지병근	권윤택	소평진	장준우	김석현		엄선덕		김창완	윤대우	정태완	김영기	박준형
구차환	김탄일	박주한	오민석	이영희	조은하	(주)해양도시가스	김인수	박창현	오경례	임영범	차기명	길윤옥	송창호	장훈성	김연승	김포경실련	오미애	대구경실련	김천일	윤현식	조락현	김영모	박태호
권도형	김현정	박준서	오성남	이원영	조태섭	강대욱	김일술	박철웅	오승용	임정훈	천재영	길호양	송철원	전운한	김영희		오인순		김태수	윤홍식	조방희	김영주	박희조
권순남	김현정	박진기	우동훈	이윤식	조해성	강신주	김일호	박태규	오승재	임중수	천형욱	김경훈	신미정	전재든	김중수	(주)신원렌터카	오홍미	김 신	김태우	이광오	조인지	김영희	방명덕
권익구	김현희	박춘선	우병설	이은경	조화영	강오일	김재석	배백호	오영수	임종철	천홍석	김도형	신주식	전호갑	김창호	강명자	웅심이칼국수	강연환	나승춘	이노수	조정학	김 욱	배동국
권 혁	김혜숙	박태준	우혜정	이은영	조홍식	강은섭	김재중	배용태	오영진	임한필	최남식	김동욱	심재필	정제봉	김희모	김남규	유영록	경희창	남운환	이덕우	조찬호	김원희	백미옥
권혁이	김혜정	박형근	원병재	이재춘	주명식	강인식	김정훈	백 석	오치홍	임형재	최동기	김동환	심정규	정진수	노재화	김두관	윤명자	공영선	남인철	이도연	조창래	김용배	백정웅
김경태	김효숙	배권식	유수연	이정희	주태진	강정미	김종재	백영기	유 현	임형철	최영남	김보준	안세찬	정택균	력키빌딩	김문경	윤상연	곽덕환	노영희	이도현	진성학	김인철	서재열
김경화	김희수	배 준	유현지	이종덕	지미선	고려가스(주)	김철현	백익순	윤두중	장시영	최용석	김봉교	양남숙	정택동	문성익	김미자	이경화	권기억	노윤경	이영호	차진근	김재석	서지희
김기영	남기표	변미애	유홍우	이중석	진장호	고려가스(주) 광주	김해룡	백중기	윤봉란	장익수	최윤정	김연고	양진오	조경래	박영미	김영로	이금순	권기혁	류학근	이미정	천홍석	김정기	서희경
김남권	남윤화	변한주	유희경	이현우	차성미	고은옥	김 현	버스조합	윤봉영	장 익	최주영	김요나단	엄상섭	조현수	박윤춘	김옥순	이기형	권병훈	맹일영	이병화	최수진	김종구	성기석
김남현	노경임	서방자	윤명숙	이혜수	찾는이광명교회	고형석	김현오	변동철	윤석구	전재상	최준영	김은희	오영재	지대근	박정민	김용훈	이두열	권윤집	문호상	이봉우	최우곡	김중기	손대근
김남희	노병일	서삼례	윤승형	이혜진	최경화	공수현	김현석	변원섭	윤영수	전재석	하성택	김인순	윤달근	최근애	박충수	김종열	이부형	권재국	박병주	이상천	최원아	김중하	송영환
김다솜	노혜숙	서순자	윤종미	이호석	최도애	곽상희	김현철	서민호	윤원진	전창주	허우연동구교육원	김재훈	윤상훈	최낙렬	박희찬	김준현	이선주	권휘동	박병준	이상필	최종만	김주홍	송인걸
김동범	노희준	서용원	윤진원	이호열	최미근	구희선	김형준	서상기	은광석	전홍모	하은이	김중배	윤종석	최연호	석경수	김진희	이임순	김대식	박종철	이상화	최준호	김진숙	송재근
김미란	류미숙	서유리	윤 철	이호성	최미영	권충화	나미영	서상기	이길남	정광우	하주아	김종율	이관순	표상욱	심재숙	김창집	이재홍	김도영	배석운	이선혜	최한석	김진중	신창호
김민재	류숙경	서은경	이강순	임진희	최상철	기우태	나병철	서수연	이동민	정두숙	한국남	김준희	이덕수	허 진	안중호	김철경	이정규	김도한	변부형	이성철	하경태	김창근	신현진
김봉화	류정희	서이석	이금숙	장지은	최승희	기창선	나성영	서재수	이봉주	정병호	한명석	김진익	이명희	홍인수	오태화	김형창	이정수	김도형	서정옥	이연재	하순화	김춘길	신희권
김선호	마이인	석학주	이기영	전광섭	최철규	김경현	류석렬	서해자	이상채	정상문	한 샘	김진희	이미경		유애순	남기후	이정수	김동석	서종철	이종경	한상인	김홍신	신희영
김성자	박경옥	성윤경	이길숙	전종석	추규호	김광영	류종희	선종아	이성각	정영훈	한신구	김철광	이미숙	군산경실련	이경숙	남익선	이중기	김동일	성광기	이지영	허남렬	김태현	안광정
김수연	박계량	성인숙	이로사	정기선	하숙례	김기봉	류한호	설상욱	이성근	정용완	한희주	김현미	이병문		이경은	도현순	이종준	김명수	성석훈	이진태	홍희청	김태형	안병진
김수진	박광수	송쌍옥	이말복	정도환	한궁희	김기홍	명노민	성인규	이성길	정원태	허기석	김휘연	이상도	고계근	이광석	류문식	이중재	김명혜	성영락	이진현	황광석	김태호	안영찬
김승복	박기은	송해정	이명숙	정민정	한운선	김길현	모현숙	소범환	이승노	정은수	허문수	김휴진	이성철	고덕영	이상운	문태식	정일환	김무중	성윤상	이진희	황귀선	김태훈	안재준
김애란	박미경	신귀분	이미경	정병만	한홍기	김남수	문정찬	손성만	이 연	정일용	허 탁	김희덕	이수영	김영혜	이상춘	문현미	정혜원	김문한	손광락	이창용	김현조	안종대	
김연옥	박미영	신민선	이미선	정병오	허기용	김동준	민문식	송광운	이영기	정중현	형민우	김희철	이영애	박은아	이석진	민경환	정희상	김민석	손상홍	이혜숙	대전경실련	김현하	안종훈
김영근	박미정	신복인	이미희	정상영	허정호	김동헌	박광복	송승중	이은방	정진철	황동현	나효훈	이원재	심규만	이선덕	박경자	조승현	김상진	손승완	이형태		김형태	오상철
김영미	박민관	신선영	이미지	정애숙	허정은	김문수	박남규	송원식	이인수	정찬용	황보관석	박경삼	이원희	원유환	이순애	박광근	조용문	김석태	송영식	장영규	강다운	김혜천	오세윤
김용길	박민영	신성은	이병렬	정은영	허창순	김미남	박병기	송윤주	이재석	정행섭	황윤용	박성도	이정건	이지수	이유설	박병돈	조용식	김선희	심병철	장은숙	강명자	김홍숙	오원관
김원선	박복임	신영옥	이병순	정인애	현지혜	김병철	박병일	송태석	이재원	정해경	황주안	박성표	이제수	임용선	이희재	박삼석	조종석	김성준	안영석	장철규	강병규	도남선	오종섭
김윤권	박상윤	신윤철	이복자	정중환	홍선영	김성일	박상원	송학동	이재윤	정혜련		박순이	이종률	최 용	임구원	박영훈	(주)대한인생제약	김수원	안정향	장호경	김태현	명윤식	오학석
김윤옥	박성배	신은숙	이부순	정지선	홍은선	김수영	박성수	송형일	이정근	정환송	구미경실련	박응도	이창형	홍관표	장순환	배건웅	채신덕	김승환	안화석	장호열	고선애	문경재	우금옥



원용철	정승래	김경철	명근홍	배영철	이현중	최홍림	강태문	김문규	김시형	김준환	모상선	박재현	서종석	신상해	오태석	이동률	이은화	장윤석	정용수	조호제	최인한	(주)강원으로	김유경
유배근	정예성	김관욱	모청웅	백재봉	이형오	최환석	강필원	김미향	김방우	김진	문규성	박재홍	서창근	신성진	오현주	이동원	이을찬	장은선	정우루	좋은데이	최재영	강동우	김유리
유병한	정우택	김광배	문영덕	서이채	이홍성	하상복	강현주	김백철	김영관	김진영	문명순	박정숙	서현수	신수진	옥성애	이동윤	이재정	장재구	정은선	최정훈	최재호	강미심	김은희
유인규	정인구	김광창	문웅	송미승	이홍식	한건준	경규성	김범준	김영길	김진찬	문상철	박종석	서현식	신승균	옥진우	이동일	이정식	장준흠	정장한	주수현	최정묵	강신길	김인섭
유인수	정인수	김기권	문준석	송영중	임종석	한상효	고명석	김병근	김영수	김진필	문윤순	박종수	서효정	신영호	왕인	이동훈	이정항	장지태	정재동	주안나	최준식	강영희	김일환
육종근	정현재	김대근	민경준	송진호	장미	한승주	고인홍	김병기	김영욱	김진현	문재천	박준순	석진열	신우천	우성철	이만수	이정호	장희정	정재호	주영숙	최찬규	고선창	김재학
윤여진	정희대	김명숙	민찬홍	송홍범	장종국	한태연	고재일	김병용	김영욱	김철도	박관수	박준홍	석태호	신정희	우정용	이명식	이정환	전보익	정종학	주재민	최철원	고인선	김정식
윤주병	조성천	김명진	박강일	송희진	전종국	홍건숙	고정연	김병하	김영중	김준덕	박길호	박진성	선다윗	신철성	원허	이미경	이정훈	전세표	정종화	주정희	최혜경	고현주	김정아
윤태희	조용석	김명철	박광배	신관용	전철균	홍국선	공병승	김보엘	김영춘	김태경	박도영	박찬일	선석렬	신충기	원희연	이민호	이제숙	전용배	정지원	지경아	최희원	공정관	김정인
이건희	조윤제	김문재	박근영	신재범	전철영	홍근표	곽달순	김봉국	김영태	김태구	박도현	박창식	설광석	신해송	유명길	이병기	이조경	전우철	정창성	지은아	하경민	곽병용	김정환
이계자	조철휘	김미주	박나영	신주환	정남준	홍석준	곽원병	김봉규	김왕의	김태원	박동범	박철중	설호석	신항남	유미진	이병진	이종원	전일수	정창화	진동식	하나연	곽중환	김정훈
이광자	조항범	김민희	박병철	심재경	정명오	홍순길	구경희	김봉수	김용원	김학진	박동석	박철한	성덕주	신혜숙	유수윤	이병호	이종철	전정호	정춘희	진상표	하상철	곽현욱	김종담
이광진	조혜형	김보현	박석일	안영하	정병수	홍진표	구명중	김부근	김용필	김해중	박두춘	박태주	성민수	심미예	유완식	이봉진	이종학	전진영	정치금	진수진	하소영	김철	김중윤
이동민	진동규	김상원	박성일	양명희	정삼수		구주영	김분이	김원태	김해영	박명식	박한규	성병창	심상조	유재엽	이상구	이종화	전현수	정패영	차동박	하순금	김철	김주철
이문지	차정민	김선미	박성진	양승희	정승임	부산경실련	구효송	김삼문	김유경	김현영	박미순	박현욱	성영미	심성구	유재중	이상미	이주환	전호열	정하윤	차동욱	하정수	김경석	김준섭
이범규	최경호	김선실	박세훈	양영주	정진대		권명섭	김삼수	김유리	김현욱	박미순	박희영	손병열	심윤정	유제현	이상백	이준승	정광현	정해근	차진규	하주수	김경순	김진태
이승용	최경훈	김선홍	박소영	양판승	정평국	(주)경성에너지	권범현	김상길	김유석	김현재	박미영	박희정	손봉주	심인섭	윤강훈	이상은	이진수	정권영	정해명	차창호	한기성	김경아	김진태
이영수	최봉문	김성두	박승춘	여성준	정혜수	강경태	권오성	김상배	김윤영	김형권	박민우	방성애	손상용	심형철	윤경만	이상진	이진수	정근	제미경	천상수	한미영	김계남	김진희
이용훈	최성구	김성철	박순욱	오승주	정호원	강규성	권오혁	김상욱	김은숙	김형균	박복용	방옥자	손소용	심혜인	윤나영	이상득	이창희	정기섭	조래영	천용욱	한병무	김남춘	김천수
이인세	최장환	김수경	박승채	오정준	조기석	강대영	권재현	김상태	김인한	김혜경	박봉수	배광호	손영일	이영아	윤남열	이상현	이춘구	정달식	조명래	천정호	한병철	김동수	김철수
이재영	최정우	김승호	박승욱	원오준	조미경	강민석	권태섭	김상호	김인환	김호범	박상명	배덕광	손정현	안기영	윤상근	이선희	이춘성	정도영	조명제	최거훈	한성국	김동순	김춘식
이정구	한경이	김신규	박영용	유경생	조순형	강민수	길태호	김석준	김장섭	김홍재	박상수	배성훈	손정환	안명석	윤상미	이상권	이현민	정동만	조문선	최규덕	한성안	김말순	김충남
이정호	한성림	김영태	박용묵	유광호	조영교	강민정	김가야	김석호	김재만	김홍휘	박상조	배수미	손창욱	안문상	윤상현	이상렬	이현재	정동영	조민주	최남연	한영수	김문석	김태균
이종범	한성숙	김영환	박인용	윤치술	조영석	강병석	김갑환	김선년	김재명	김후승	박석원	배용준	송교욱	안병록	윤석준	이성림	이현주	정말순	조상희	최달용	한홍석	김미정	김형걸
이지영	한정화	김예영	박인철	이덕일	조용호	강병호	김경숙	김선미	김재일	김훈태	박선민	배종출	송문숙	안원호	윤성미	이성열	이혜영	정명길	조성렬	최민식	허진욱	김병욱	김형기
이철은	한화교	김정민	박정석	이도홍	조인수	강삼욱	김경일	김선희	김재찬	나성민	박선아	배혜래	송미경	안재민	윤수성	이성훈	이훈진	정명식	조양래	최병근	허해녕	김부석	김호준
이학재	황의달	김정아	박정희	이명희	조준범	강상섭	김경조	김성권	김재훈	남경태	박성수	배화숙	송순임	안종일	윤재성	이성희	이희길	정명영	조용규	최병찬	허현도	김상기	남상진
이현대	황재익	김정용	박종두	이문희	천병식	강성권	김경택	김성근	김정량	남기찬	박성철	백대영	송원섭	양동열	윤재철	이세형	임무진	정명희	조용언	최보규	현지훈	김선철	노금희
이현호		김종숙	박종범	이범수	천재관	강성태	김광식	김성수	김정민	남영현	박성호	백혜랑	송은주	양시경	윤정선	이순정	임용호	정문수	조용우	최부환	홍봉선	김성권	동병희
이형복	목포경실련	김종익	박종철	이병채	천현중	강송희	김광희	김성열	김정수	노경조	박성훈	변영호	송재광	양원석	윤종관	이승호	임우택	정미경	조유장	최선아	홍성봉	김성근	라용일
임경수		김종호	박주이	이상권	최명숙	강수화	김기태	김성응	김정순	노상훈	박승제	부두봉	송재은	양종철	이갑준	이시화	임종수	정미영	조유득	최성관	홍일표	김성욱	문제용
장명욱	강병국	김창세	박창수	이상로	최병기	강시명	김길수	김성춘	김정현	노영욱	박시우	서경국	송정숙	양종필	이강진	이영갑	임호	정미한	조유환	최수미	홍종인	김수근	민현정
장복수	강병조	김춘길	박창윤	이영춘	최연식	강예윤	김남식	김성태	김종구	노일용	박연수	서경숙	송종두	엄세원	이경학	이영신	장귀봉	정민재	조은아	최수영	황국자	김수정	박경미
장춘순	강성태	김태중	박철수	이유리	최완수	강유동	김남일	김성호	김종기	녹십자의원	박영봉	서만석	송희준	엄호천	이광원	이영호	장금구	정상문	조은정	최승환	황보승희	김순복	박경심
장형근	강영태	김판조	박한호	이인수	최인권	강유창	김대래	김성훈	김종한	도한영	박영현	서명대	신경근	오병루	이귀선	이영훈	장다감	정순영	조재형	최영주	황영식	김시형	박계화
장화식	강제석	김하성	박해령	이재광	최일	강재현	김도	김성훈	김주영	류강렬	박용주	서명립	신군재	오성환	이귀순	이옥형	장동범	정순일	조종석	최원석	황인규	김영석	박근철
전영춘	강주천	김홍식	박혁진	이중화	최재경	강재호	김동명	김세한	김주현	류봉호	박용한	서미화	신동욱	오세룡	이규현	이용주	장문정	정신모	조지혜	최원용	황인석	김영식	박덕희
전혁규	곽경배	김희환	박현희	이찬식	최종명	강정규	김동현	김수미	김주호	류위훈	박윤기	서범수	신만석	오연석	이남기	이위덕	장봉주	정애니	조철호	최은석		김영호	박명중
정대용	권인철	나지애	박홍식	이철수	최현철	강주하	김동호	김수빈	김주희	류종성	박재본	서봉원	신병훈	오영자	이남중	이은진	장성호	정영점	조현수	최은주	속초경실련	김원기	박문수
정상희	김경욱	노경윤	배상기	이한경	최호길	강종묵	김명석	김수자	김준기	류진호	박재욱	서양수	신상규	오철조	이도준	이은화	장영철	정용성	조홍규	최이랑		김원일	박병훈



박성진	양언석	이성호	정홍기	황보해용	김안식	민경록	신한미	이용태	정자홍	홍종수	안산경실련
박성한	양영희	이수영	조영수	황시영	김연기	박동선	심재광	이용호	정중훈	황민석	
박수경	양진옥	이승재	조성열	황영필	김영기	박민철	심현자	이운창	정태정	황성우	강기성
박영덕	양해준	이은우	조현국	황은숙	김영래	박순례	안혜영	이원욱	조경두	황용원	강수문
박영희	어주하	이영선	주승우		김영수	박승원	양우혁	이원재	조규만	황지숙	강수진
박용기	엄태영	이영순	주영래	수원경실련	김영태	박영양	양재철	이윤희	조규민		경창수
박정민	오관영	이우영	주용현		김원동	박용환	양진하	이의봉	조규장	순천경실련	고관
박종갑	오광택	이운연	진형배	(주)청영건설	김용로	박원호	예인기	이재득	조규호		고미나
박종학	오승택	이은희	천성미	강미경	김용석	박윤환	오민범	이재우	조금현	(주)세명기전	고영인
박종현	오윤택	이인숙	천성필	강민철	김용철	박익중	오세환	이정원	조미경	(주)파루	곽태영
박종훈	오홍철	이재선	최근석	강유정	김 옹	박재관	오완석	이정하	조병모	강철호	권태근
박준범	원선목	이정하	최길순	강인선	김은하	박재순	오일용	이종영	조석환	김미정	김경숙
변성수	원은주	이주연	최돈환	강희정	김인석	박정화	오지현	이종만	조승백	김선영	김기범
변인미	유성봉	이종길	최동권	강희진	김재기	박제현	오해경	이종주	조재경	김성준	김기회
서관우	유영민	이진어	최동훈	고기준	김재성	박주영	우양미	이주연	조형훈	김종선	김대일
서영기	유영창	이진형	최서호	고병익	김정욱	박준배	유병욱	이주현	조화윤	김준호	김동인
서은진	유종완	이 철	최성주	구본숙	김정희	박진순	유상철	이진성	주영훈	김지훈	김명희
선영복	유주희	이필선	최승영	권윤희	김종석	박태경	유상태	이찬용	지순이	김필래	김미경
소문섭	유철중	이필순	최애리	권후남	김종선	박현웅	유재성	이창모	진송주	김현덕	김 민
손병섭	유혜정	임정길	최영미	김경수	김종오	박형순	유제상	이창진	최문태	나창수	김병재
손재복	윤광훈	임종희	최용석	김경호	김준혁	박화진	윤귀현	이판수	최석환	박재현	김복희
송명근	윤규식	장경민	최유정	김기한	김직란	박홍덕	윤남권	이필근	최영숙	박제성	김상혁
송은희	윤기순	장근호	최중현	김도형	김진한	배금란	윤두천	이해균	최영희	서용현	김석용
송제철	윤재훈	장영석	최지문	김동규	김철환	배창수	윤희경	이현순	최인수	오정록	김성봉
송종철	윤재희	장봉주	최택수	김동선	김충관	백승천	이경섭	이효주	최인자	위미영	김송철
송훈석	윤정은	장은선	최혜경	김동원	김태선	백혜련	이경환	이희수	최진학	이금호	김안식
신선익	윤 준	정재환	최호섭	김말순	김현구	변수정	이국희	이희숙	최진환	이복남	김영림
신영근	이건옥	장주열	추중권	김미선	김현태	변영선	이금희	임혜경	최찬호	이상휘	김영숙
신재민	이경호	전이령	탁동철	김미옥	김혜련	서경희	이기홍	장영욱	하순진	이욱기	김영희
신종출	이경상	정문교	하성란	김미정	김혜숙	서상범	이명욱	장점오	한경수	이천오	김윤재
신창승	이경애	정봉재	한살림	김민수	김희웅	서수정	이민구	장현주	한국지	이휴정	김윤희
신창현	이기원	정상철	한상민	김민혁	나민수	서정근	이범주	전희락	한상율	임종채내과의원	김은주
신현식	이대복	정성근	한성희	김백규	나태성	서정욱	이상명	정계화	한옥자	장동식	김정복
신홍식	이든섭	정순희	한정숙	김봉균	남기석	서 환	이상해	정성균	한창균	정순관	김정숙
심연흠	이문성	정원모	한국기	김석규	남상덕	서홍석	이성호	정수진	한풍교	정은희	김제동
심화섭	이미경	정윤희	허우린	김석진	남창현	성현구	이성희	정순옥	허성균	주지은	김종길
안경수	이병선	정은솔	홍명관	김선혁	남택진	송기진	이수행	정순혜	허운화	한지은	김지영
안경자	이봉진	정은희	홍인숙	김성란	명홍진	송원찬	이승호	정양훈	허재구	형근혜	김지훈
안세준	이상식	정진수	홍천동	김성연	모성은	신동섭	이영인	정연규	허현태	홍상우	김창모
안종석	이상정	정호원	홍해용	김시영	문순심	신지훈	이영주	정원제	홍영호	황인용신경과의원	김창하

김철진	서근식	이벽희	최영화	김한일	이수진	홍성현	안성용	고운지	김두환	김은하	마성호
김철환	서정열	이병욱	최윤정	김햇님	이승용	홍순성	오경섭	고인정	김만석	김의섭	마석홍
김초환	서혜경	이상현	최임이	김현진	이연호	홍승희	오상경	공미선	김미혜	김인기	마석훈
김춘옥	석진성	이선숙	최채림	김후승	이연환	황규영	오승석	구경혜	김병기	김재임	마세진
김춘호	설점순	이선희	최현수	노국환	이용성		윤주현	구준모	김병수	김재홍	마애진
김태훈	성준모	이숙경	하혜경	문희정	이오영	여수경실련	윤현희	권광일	김봉덕	김정범	목현실
김해만	손상경	이숙란	한미현	이영주	이의협		이문식	권순원	김상실	김정분	문미자
김현삼	송기범	이옥례	현유경	박민기	이제두	강규호	이 식	권순원	김상훈	김정수	문승욱
김현호	신광재	이용진	형천호	박민정	이지연	강성훈	이영재	권영미	김선우	김정욱	문연래
김형욱	신남균	이용천	홍장표	박수완	이홍록	강용원	이종원	권영진	김선일	김정진	민승래
김혜숙	신동국	이정미	황연화	박은정	이희연	고용국	이 철	권영훈	김선희	김정진	박경룡
김혜영	신병철	이정아		박현일	임다정	공성식	이평호	권오섭	김선희	김정천	박경미
김호득	신윤관	이주옥	양명경실련	방민경	임승기	곽현철	임호상	권오주	김성국	김종복	박기환
김화궁	신장환	이창수		배만병	장영달	권인홍	장준배	권진형	김성국	김종원	박명순
나정숙	신청하	이천환	강대우	배연정	장은혜	김동식	정대훈	권혁봉	김성길	김주생	박명철
남기순	심규호	이희대	강병국	서동일	전미옥	김동채	정승환	권혁왕	김성애	김진수	박병건
남승하	양근서	이희연	강신우	서시운	전승희	김미순	정은자	권혁중	김성완	김진영	박병대
남정애	양태호	임명자	구민진	서영균	전재현	김석봉	정정식	금청하	김성재	김진용	박상욱
도원중	양현석	장동근	권수연	서진숙	전종덕	김성춘	정주현	기보중	김세동	김진창	박상용
류영숙	여만식	장동일	권오병	성종규	정경숙	김숙자	정차섭	김 준	김수동	김진천	박상임
문강섭	오관영	전준호	김경수	송명원	정남선	김영주	정치훈	김강용	김숙현	김진천	박상철
문연숙	오남숙	정명숙	김경희	신순봉	정연준	김영표	제성명	김강산	김순업	김창균	박선규
박경용	오은석	정승현	김광배	신정원	정영수	김유성	재윤경	김경건	김순업	김창수	박선영
박경중	오정순	정안철	김광윤	신희정	정주영	김정선	조현혁	김경률	김승민	김춘자	박성희
박경태	오진호	정연주	김대우	안경모	정하성	김종구	채홍섭	김경림	김연희	김태진	박수자
박금자	오현주	정용기	김동운	안영일	조재국	김항우	천상국	김경중	김영근	김학경	박양래
박기욱	오현주	정은수	김동현	안정희	조춘선	김현태	하성락	김경화	김영자	김학재	박옥선
박동신	왕은희	정은식	김명숙	엄숙자	조현주	나형선	한병세	김경희	김영자	김현미	박 인
박상근	원미정	정은혜	김명주	여병찬	진랑규	문봉호	한해광	김광수	김영준	김현숙	박인오
박상호	윤상민	정이진	김민섭	여현정	채 현	문상엽	홍춘식	김광수	김영찬	김형식	박일엽
박은호	윤성웅	정정순	김선자	염 총	채풍묵	박병규		김광식	김영철	김호열	박재우
박종숙	이갑순	정주호	김수은	오성탁	최갑주	박상신	이천여주경실련	김광인	김영춘	김홍태	박전희
박종호	이강숙	정진욱	김양수	유영표	최경호	박성현		김금녀	김예론	남기태	박전희
박준연	이경란	정철욱	김영범	윤덕규	최석운	박숙희	강경모	김기석	김옥자	남오철	박정하
박창수	이경석	제종길	김용란	윤수영	최소영	서영남	강승균	김기열	김왕곤	남오철	박정화
박태순	이경진	조경래	김용준	윤정원	최영식	서호영	강신욱	김기은	김용태	남용대	박종구
박해부	이근미	조안호	김일구	윤종대	최영준	성수미	강영애	김기태	김우재	남천우	박종오
박희경	이미숙	주만수	김정화	이동연	최창규	송승하	강정순	김길홍	김운경	노필순	박종욱
방은경	이미숙	최경숙	김주남	이명규	하보균	심경택	강형영	김대륙	김용제	노필원	박준모
백영국	이민근	최복수	김진영	이상건	허여령	심재수	고옥자	김대륙	김은이	류시근	박진형



주성주	김행조	윤일규	최석남	공공디자인이즘	김미나	김영환	김종태	남기상	박공규	박종희	서미화	신명자	연영규	유한철	이명훈	이인선	이현주	전년규	정춘선	청주인강생협	풀꿈환경재단	고태규	윤종형
최원배	김혜영	윤정섭	최석림	곽규은	김미라	김영환	김주복	남대우	박관주	박주호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범식	연영태	육미선	이미경	이인영	이형각	전병선	정해영	청주어성의전화	풍경성	권용범	유재원
최재형	김홍철	이경숙	최신수	곽덕신	김미숙	김영희	김주환	남성욱	박광수	박진우	서완석	신성일	연인하	육종길	이미순	이일만	이형우	전병찬	정희승	청주총학협동조합	하옥란	김정숙	윤장혁
최정현	김효실	이경원	최창환	곽승호	김미숙	김예시	김준경	남성욱	박구원	박찬병	서용원	신승만	연 준	윤건영	이미화	이일우	이혜정	전세식	조경주	청주KYC	하재성	김광배	윤재경
최필호	나이란	이경주	충청인수마켓협동조합	구남휘	김미현	김완희	김준년	남중순	박근수	박창호	서우석	신승수	연철흠	윤관수	이민영	이장희	이화련	전용렬	조경주	청주YMCA	한상화	김남철	윤재선
태도건	남영희	이영근	하종률	구안서	김미희	김용국	김준수	네모토 마사쓰구	박근수	박철규	서울고속(주)	신승진	연호석	윤기용	이범구	이장희	이호숙	전용표	조국현	청주YWCA	한수환	김대영	윤진현
하영기	내일시스템(주)	이병덕	한광수	권경미	김민호	김용규	김진구	노근호	박기환	박철석	서인호	신영구	염봉순	윤미정	이범석	이재덕	임건철	전우석	조규호	최각규	한승환	김범철	윤학로
허효창	노덕우	이상일	한문식	권미경	김병우	김용덕	김진철	노영민	박남순	박철완	서준철	신옥희	오명진	윤병희	이병관	이재영	임규찬	전창해	조동순	최경호	한영선	김석중	이경욱
	노순식	이상춘	함옥출	권성안	김병의	김용덕	김진태	녹색청주협의회	박동구	박해덕	석명용	신용재	오복수	윤상이	이병호	이재영	임근수	전희택	조상현	최계원	한은례	김선배	이관행
천안아산경실련	류임상	이서영	허 영	권수복	김봉술	김용석	김진호	대신정기화물	박영규	박현순	석 준	신정식	오상록	윤석위	이복순	이재원	임기중	정경화	조성오	최광민	한익돈	김승현	이복연
	류지현	이선열	허종일	권영기	김봉주	김용승	김창한	자동차(주)	박문희	박형배	선종열	신철영	오석송	윤승현	이상규	이재은	임동현	정교순	조승주	최대철	한인섭	김용식	이상섭
강민숙	맹창호	이수현	현선옥	권오건	김상무	김용태	김천시	대전경실련	박미영	박호표	설경철	신태경	오연경	윤정수	이상복	이재춘	임병락	정 균	조승연	최상영	한정현	김용재	이상철
강인영	명진아	이승열	홍영중	권오순	김상수	김용규	김 철	대정건설(주)	박민순	박홍래	성기남	신필희	오영애	윤정숙	이상식	이정규	임성진	정란희	조영화	최상희	한진석	김정현	이석원
강태윤	박민숙	이원자	황중현	권태성	김상훈	김유미	김춘희	도선봉	박석현	박희분	성주우	신해운	오영필	윤한식	이상중	이정석	임성총	정미화	조용숙	최성희	함종철	김종식	이승준
강필호	박복연	이인범	황천순	권혁상	김선기	김유호	김태성	두꺼비마을신문	박선현	반영운	성환용	신현식	오윤희	윤현우	이석희	이정수	임용수	정병숙	조윤행	최승민	허석필	김진상	이원규
강희두	박상면	이종욱		김갑용	김선영	김윤모	김태성	두꺼비실업협동조합	박성호	반주현	손세원	신희숙	오영희(전안리관리관)	윤혜정	이선미	이정철	임용현	정상섭	조은애	최영중	허성만	김광만	이은영
건창여객(자)	박수석	이종필	청주경실련	김강일	김선희	김은옥	김태인	두꺼비친구들	박세웅	배관희	손윤희	심규석	오창민	윤호영	이선순	이종섭	임은정	정상신	조율선	최우식	허 영	김한택	이인섭
고병현	박순환	이종호		김건도	김성수	김용일	김태준	류규식	박연수	배병기	손정훈	심상학	오태경	이가빈	이선우	이중수	임의순	정상옥	조이현	최윤정	현상주	김해경	이중민
고영술	박종갑	이철호	(세한국악사신행회 부회장)	김경자	김성천	김용철	김태희	류근모	박영미	배상은	손호진	심수영	오태진	이건철	이선희	이종실	임일수	정상완	조일원	최은실	현 진	김희성	이택수
구분영	박종래	장경식	(주)명성엔지니어링	김경호	김승일	김인숙	김명환	류근운	박영수	배응환	손희준	씨투넷(주)	오훈영	이경순	이성민	이중윤	임재경	정상용	조일현	최재국	형미희	남영우	임재선
구자형	박종복	장기수	(주)사람과경제	김경호	김수열	김인자	김필제	류덕환	박영숙	배종서	송길화	이리움청주생협	우상동	이경희	이수복	이주민	임재규	정상현	조정식	최정호	홍강희	박도수	전규호
금명기	박태서	장원철	(주)청주재활용센터	김계옥	김수환	김일경	김학민	류연옥	박영순	백승협	송봉화	안병대	우장영	이광규	이수영	이주봉	임종승	정성희	조춘희	최종문	홍경선	박상규	전근우
김경은	박현희	장재식	강대성	김광복	김숙자	김일수	김학실	류용길	박용석	법무법인 주성	송선호	안성기	원광희	이광식	이수한	이주선	임지은	정승희	조항전	최진욱	홍석원	박상렬	전동준
김기태	백승돈	전승례	강 민	김광직	김순구	김재복	김학현	류우열	박용연	변광섭	송영준	안성호	유광식	이광용	이순남	이주형	임한빈	정영래	조형규	최진완	홍성진	박정근	전만식
김길년	백우현	전종한	강민오	김광희	김순영	김재연	김항자	류재호	박익규	변길주	송의천	안영숙	유근수	이광희	이순호	이준배	임한수	정영섭	조혜경	최종진	홍성학	박형일	전성휘
김미경	보성여객지동재(주)	정미영	강병용	김교선	김순천	김재원	김현상	류진호	박인규	변만수	송일근	안장현	유미숙	이귀형	이승배	이준석	임현경	정영희	주서택	최태호	홍성학	방영열	전양호
김미경	복아영	정성진	강석형	김규설	김승일	김재중	김현숙	류찬걸	박인숙	변민수	송종찬	안재홍	유민상	이규선	이승준	이중섭	임혜숙	정용민	주성규	최현숙	홍순주	방수미	전운성
김미수	삼안여객(주)	정운양	강성래	김규원	김승효	김재학	김현주	류학천	박인자	변상태	송주성	안치석	유선우	이규호	이승철	이중원	임희영	정우영	주성중	최현태	홍승표	방수진	전호성
김민수	새로나병원	정윤세	강승범	김남진	김안식	김재형	김형우	류현숙	박재경	변상호	송태성	안태희	유성훈	이근식	이애자	이중현	장경석	정은경	주재구	최형도	홍우표	변용환	정의성
김봉미	송용완	정재교	강영미	김대중	김양식	김정문	김형창	리드산업개발(주)	박재관	변성민	송태화	양계인	유순영	이금로	이양우	이중훈	장남운	정은희	주재현	최호균	홍용표	변좌용	정지만
김상관	신동현	정치화	강은희	김동암	김연식	김정미	김호식	맹상현	박재익	변은영	송필수	양기정	유스투게더	이기만	이연옥	이지영	장동대	정인수	주창백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황경수	변지량	정종교
김상철	양경모	정하진	강진성	김동욱	김영근	김정승	김호일	맹석주	박정훈	변의수	송혜근	양기춘	유영숙	이기정	이영숙	이지영	장병순	정일기	지동규	충북새마을금협중앙회	황규혁	석영기	정휘돈
김세곤	오관식	조강석	강현구	김동진	김영란	김정웅	김홍구	맹현숙	박종관	변장섭	송호현	양미선	유영아	이대응	이영진	이진옥	장병희	정일택	지 민	충북시민재단	황동훈	손헌기	조성모
김소당	오수균	조영주	강호문	김동형	김영민	김정일	김한국	맹정희	박종룡	변종윤	신경운	양철호	유응모	이동로	이영희	이철희	장선배	정장영	지현성	충북생애연구소(재민부)	황라훈	손승주	조성자
김용진	오승화	조하심	강희선	김두호	김영배	김정초	김황래	문성오	박종서	봉원진	신국희	엄경출	유인봉	이두영	이예원	이충희	장영건	정재량	차태중	충북여성인력성상소 불분	황선건	송창근	최영진
김종문	오인철	조호익	경준용	김말숙	김영옥	김정태	김효일	문종극	박종선	부찬희	신규식	에듀크리안트	유일수	이만형	이옥인	이한훈	장재봉	정지성	채명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황성주	신길호	최희수
김진국	우승윤	주홍중	고금순	김명수	김영재	김종구	김홍일	민경여	박종순	상록수	신동선	연광석	유재일	이맹원	이우석	이해승	장호진	정진아	채희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황영미	신선철	춘천상공회의소
김진태	유진영	차준희	고영구	김명자	김영준	김종기	김희수	민경자	박종을	생태교육연구소 터	신동예	연구순	유철호	이명관	이유정	이항미	장홍원	정진원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청주수미마켓협동조합	황중규	신혜숙	허상준
김철수	윤권중	최경식	고영재	김문옥	김영진	김종철	김희숙	민승기	박종태	서길용	신명섭	연구용	유행열	이명순	이윤범	이현수	전광호	정진하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도시개발지원회	안호춘	한희민	
김태영	윤미숙	최경영	고황기	김문중	김영태	김종태	나채경	민청식	박종혁	서대석	신명수	연방희	유현덕	이명호	이인규	이현식	전길자	정 철	청주생애연구소(재민부)	표한용	춘천경실련	양태식	함태성

함형주	공영서	김보람	김정혜	문기영	안혜정	이동학	이우년	장현정	조인호	한상복
허영준	구자욱	김봉만	김준태	박광열	오호창	이동훈	이욱재	전극중	주해남	허태구
허장현	권부혁	김상수	김진동	박근영	우흥인	이동희	이운용	전장근	지승익	해광스님
황덕호	권정무	김성예	김태석	박인호	원호연	이미나	이원탁	전정렬	진대용	홍승철
황혜숙	권태훈	김성호	김태진	박준규	유대철	이미아	이익창	전해란	최동수	화일산기(주)
	권택석	김수구	김태현	박태승	유성찬	이상구	이재학	정승태	최병문	황보경운
포항경실련	김기호	김용갑	김태희	방성호	유재원	이상민	이정훈	정은미	최성훈	황보원주
	김대열	김은정	김현철	배종필	유재준	이상윤	이창은	정태문	최윤정	황영한
(주)동서개발	김대영	김익태	김홍기	서동욱	윤석열	이상일	장병화	정혜영	최정식	
(주)제일테크노스	김동완	김인욱	김효성	손종수	이경식	이상조	장성숙	정 휘	최대열	
(주)케이알티 조규용	김명자	김장수	나기합	손준호	이규은	이성균	장인호	정희철	최희수	
강용호	김문규	김재익	남승국	송희연	이동진	이수창	장태윤	조동욱	태평초	
고재국	김미경	김정수	도승표	안석현	이동철	이승건	장현수	조은경	편도선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고계현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처장: 윤순철, 부장: 최승섭, 간사: 윤은주
기획총무·조직교육팀	02-766-5626	국장: 김현기, 부장: 채준하, 간사: 오세형	(사)경제정의연구소	3673-2144	국장: 권오인
회원홍보팀	02-766-5627	국장: 윤철환, 간사: 김지경	(사)경실련통일협회	3673-2142	국장: 김삼수, 간사: 조성훈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이상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3673-2147	처장: 윤순철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정유림	시민권익센터	766-5624	간사: 권태환
사회정책팀	02-3673-2145	국장: 남은경	소비자정의센터	766-5625	간사: 박지호
국제팀	02-766-5623	간사: 이현아	월간 경실련	766-5626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부장: 신명자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김창근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국장: 오경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부장: 김성아, 팀장: 이혜정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왕서정
경기·강원권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협	031-253-2265		포항경실련	054-273-0185	간사: 장현정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간사: 최미영	전라·제주권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흥영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정은숙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인순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상운, 간사: 변정혜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통우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심현섭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좌광일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욱			